

미중일 여론과 우리 공공외교의 방향

- 3 최근 미국여론과 공공외교적 함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21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于婉莹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 40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본 한일관계 (2019.1~11)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 대학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



최근 미국여론과 공공외교적 함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공격적 일방주의 외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무역이나 동맹에 대해서 초당적이고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공격도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202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정치인들은 미국 국민의 선호를 외교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미국 국민의 국제주의적 선호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생각을 활용하는 대미 공공외교가 바람직하다.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于婉莹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한중관계는 2017년 사드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도 점차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간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제기했다. 한중 간 상호 인식은 상호작용을 하는 쌍방향적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호감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객관적인 인지를 유도해 나가는 것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본 한일관계 (2019.1~11)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 대학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

본고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입장과 논조의 유사·차이점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에서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 사회에는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용공 문제는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역사'와 '법'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최근 미국여론과 공공외교적 함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1. 증가하는 대미 공공외교의 필요성

- ◆ 2016년 트럼프 후보의 예상치 못한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국내정치에 서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 이르기 까지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
 - 2020년 대통령 선거도 결과여하에 따라서 2016년 대통령 선거처럼 미국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 특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은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음.
- ◆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자 이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들도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특히 북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 즉, 미국 국민들이 이제는 문화나 지식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정책 공공외교의 대상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음.
- ◆ 전통적으로 대외 정책은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지만,¹⁾ 선거를 앞두고 대외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후보자들의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2020년도는 미국 국민들이 한반도에 관해 갖고 있는 견해가 단순한 견해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외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
- ◆ 공공외교가 외국 국민으로 하여금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문화 공공외교), 한국을 이해하고(지식 공공외교)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게(정책 공공외교) 하는 외교라고 한다면 2020년은 대미 공공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
- ◆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는 결국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호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잘 대변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됨. 트럼프 같은 ‘워싱턴 아웃사이더’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기성 정치인들은 종종 유권자들의 선호를 정확

목 차

1. 증가하는 대미 공공외교의 필요성
2.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미국 국민의 인식: 국제주의의 부상
 - 가. 국제주의적 여론의 증가
 - 나. 국제주의적 여론의 증가 원인과 함의
3. 한반도 관련 미국 국민의 여론
 - 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나. 북한에 대한 대응
 - 다.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철수
4.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 가. 엘리트 대상 공공외교의 한계
 - 나. 대중 대상 공공외교의 모색

히 파악하거나 충실히 대변하는 데에 실패.

※ 워싱턴 아웃사이더의 등장은 미국 정치에서 역사적으로 종종 반복되는 현상.

- 70년대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당시로서는 워싱턴 아웃사이더였던 지미 카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92년 대선에서는 NAFTA를 반대한 기업인 로스 페로(Ross Perot)가 무당파로 출마하여 18.9%를 득표함으로써 당시 재선을 꿈꾸던 조지 H.W. 부시가 낙선되는 데에 기여.

- 미국 공화당 내 '티 파티 운동 (tea party movement)'의 발생이나 민주당 내에서는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인기를 얻는 현상 등은 미국의 전통적인 정당정치에 변화가 오고 있는 조짐일 수도 있음.

◆ 트럼프 후보는 '워싱턴 아웃사이더'로 기성 정치인들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거나 대변되지 못한 미국 국민의 선호를 대변함으로써 당선에 성공. 2020년도 미국 대선의 결과와 대외 정책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여론의 추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2.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미국 국민의 인식: 국제주의의 부상

가. 국제주의적 여론의 증가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래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일방주의적 무역정책과 외교정책을 전개하여 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무력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탈퇴하였으며,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과 체결한 FTA 협상은 재협상하는 한편,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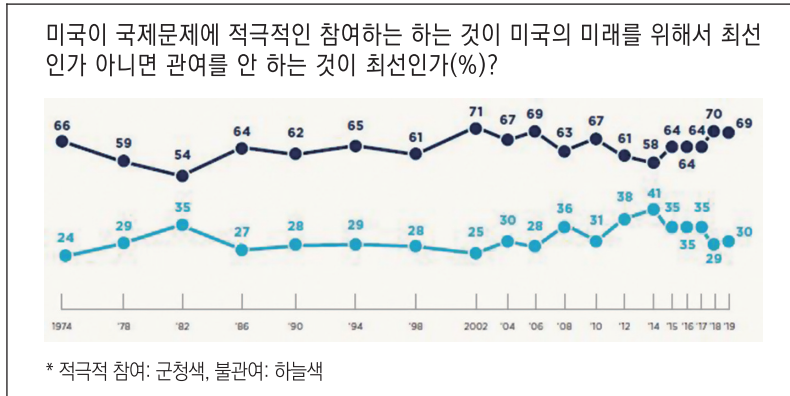
- 대외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보다는 제재를 앞세우고, 방위비 부담문제를 놓고 NATO등 전통적 우방과 불화를 낳고 있으며, 오히려 전통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러시아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점으로 2016년 이후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주의적 견해(미국의 국제적 역할지지, 국제무역 지지, 국제제도 존중, 동맹 중시)가 증가하는 현상이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국제주의적 견해가 급증

- 이러한 입장은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한테서 공히 발견되며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 역대 최고 수준에 접근.

1)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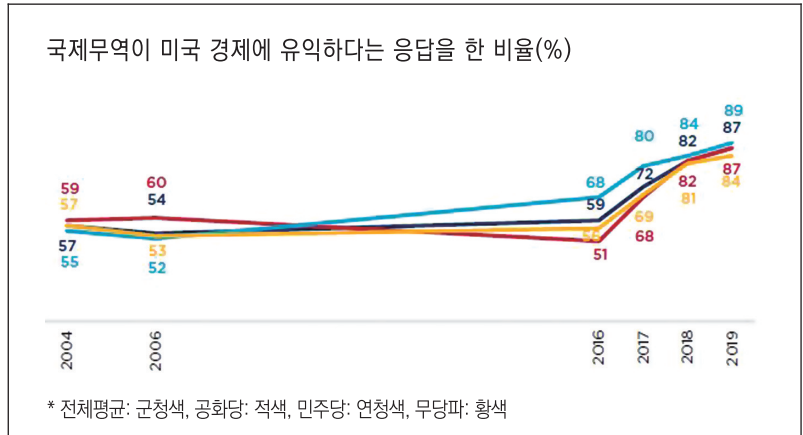
출처: Dina Smeltz, et. al. 2019. "Rejecting Retreat: Americans Support US Engagement in Global Affairs." p.3 & p.10.

- ◆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2019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인 10명 중에 7명꼴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응답 (2018년 70%, 2019년 69%).
 - 적극적 참여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5년, 2016년, 2017년 내내 64%였는데 최근에 5~6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것임.
- ◆ 2018년과 2019년의 응답률 70%와 69%는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여론조사가 시행된 1974년 이래로 2번째와 3번째로 높은 수치.
 - 가장 높은 수치는 2002년의 71%로서, 2002년의 71%는 2001년 9.11 테러에 따른 일시적 효과였을 것으로 보이며 2003년 이후에는 감소하였음. 이와 달리 2018년과 2019년의 수치는 9.11 테러 같은 예외적 사건이 없는 평시에 나타난 수치이며, 높은 수치가 2년 연속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아울러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국민들의 견해가 심하게 양극화되었는데 2018년과 2019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초당파적 현상이라는 점도 주목할만 함.
 - 2019년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의 75%, 무당파의 64%, 공화당 지지자의 69%가 미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함. (전체평균은 69%).

정치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주의적 견해는 초당파적 현상

- ◆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되었는데,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 국민들이 정파를 불문하고 고립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주의에 대한 지지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이 같은 국제주의적 성향의 증가는 아래에서처럼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추가적으로, 그리고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2) 국제무역에 대한 지지



출처: Helm, et. al. Oct. 2019. "Record Number of Americans Say International Trade Is Good for the US Economy." p.3.

정파를 초월하여 국제
무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어

- ◆ 국제무역에 대한 미국 국민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200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는 국제무역이 유익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0~60 퍼센트 내외로 유지되다가 트럼프의 집권 이후부터 해마다 5~13%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
 - 전체평균이 2006년 54%, 2016년 59%였다가 2017년 72%, 2018년 82%, 2019년 87%로 역대 최고치
- ◆ 국제무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있어서는 정당간의 차이가 2016년에 17 퍼센트 포인트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매년 감소하여 2019년에는 5 퍼센트 포인트로 축소.
 - 즉, 정파를 초월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크게 틀리지 않아 보임.
- ◆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이 불공정하여 미국에 불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WTO의 무력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과 체결한 FTA의 재협상, 중국에 대한 제재 관세 등 반자유주의적 조치를 시행. 트럼프의 이러한 인식이나 정책결정은 국제무역이 미국 경제에 유익하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점점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

- ◆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에 연이어 반자유주의적 조치들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이 국제무역이 미국에 유익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이론적으로는 가능.
- 여러 여론 조사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당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무당파에는 적용되기 어렵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적용이 불가.
- 미국 국민의 국제주의적 성향은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도 추가로 확인가능.

3) WTO에 대한 지지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에도 미국은 그 판결을 이행하여야 하는가?(%)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평균: 77	전체평균: 20
공화당 지지자: 65	공화당 지지자: 31
민주당 지지자: 87	민주당 지지자: 12
무당파: 76	무당파: 22

출처: Helm, et. al. Oct. 2019. "Record Number of Americans Say International Trade Is Good for the US Economy." p. 7.

- ◆ 트럼프는 WTO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다른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최악의 무역협상 ("the single worst trade deal ever made")이라고 비난하였고, WTO 상소위원의 선임을 반대하여 현재 상소위원 7명 중 6명이 공식으로 WTO의 불능화를 초래.
- ◆ 하지만 미국인들 사이에는 WTO에서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그 판결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77%에 달하며, 그러한 지지는 초당적.
 -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무당파의 과반수가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
- ◆ WTO를 존중하는 이러한 초당적 여론은 그동안 WTO에 대해 부정적 언급과 행동으로 일관해온 트럼프와 상충가능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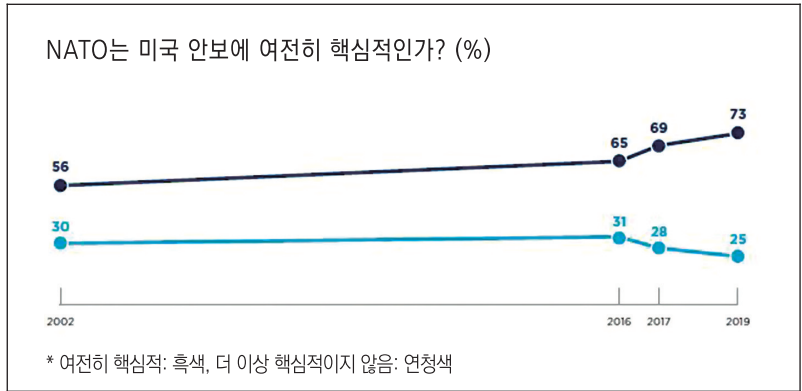
4) 군사동맹에 대한 지지

- ◆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과 다른 NATO 회원국과의 관계는 역사상 최악으로 악화.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다음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NATO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 NATO가 미국의 안보에 핵심적이라는 견해가 미국 국민들 사이에 2002

NATO가 미국안보에 핵심적이라는 견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여 201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

〈NATO와 미국의 안보〉



출처: Smeltz, et. al. "Rejecting Retreat: Americans Support US Engagement in Global Affairs." p. 18

동맹이 미국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견해가 74%, 동맹이 미국과 동맹국에 모두 유익하다는 견해가 과반수

- ◆ 동맹 일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은 비슷하게 답변. 2019년 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74%가 다른 나라와 맺은 군사동맹이 미국의 안보에 기여를 한다고 인식.
 -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이 미국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군사동맹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대답했고, 18%는 별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8%는 군사동맹이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고 대답.
- ◆ 아울러 미국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다른 나라와의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
- ◆ 미국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맺고 있는 지역 동맹에 대해서도, 이들 동맹이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견해가 2017년 조사와 2019년 조사에서 모두 50% 이상이고,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그러한 대답을 하는 비율이 증가.

〈동아시아 지역 동맹에 대한 평가 (2017년 vs. 2019년)〉

	2017	2019	증감 (퍼센트 포인트)
주로 미국에 이익	9	7	-2
주로 동맹국에 이익	21	21	0
미국과 동맹국에 모두 이익	51	53	2
아무에게도 이익 없음	15	15	0

〈유럽 지역 동맹에 대한 평가 (2017년 vs. 2019년)〉

	2017	2019	증감 (퍼센트 포인트)
주로 미국에 이익	9	6	-3
주로 동맹국에 이익	26	24	-2
미국과 동맹국에 모두 이익	53	58	5
아무에게도 이익 없음	9	9	0

출처: Smeltz, et. al. "Rejecting Retreat: Americans Support US Engagement in Global Affairs." p. 17

나. 국제주의적 여론의 증가 원인과 함의

-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 정부는 국제주의를 배격하고 미국 위주의 일방주의를 공격적으로 추구하여 왔음.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추진하는 바로 그동안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국제주의적 성향이 갑자기 그리고 초당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일련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음.
- ◆ 트럼프의 집권 이후 이처럼 여론이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한 분석은 존재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James Stimson과 Magnus Carlsson, Gordon B. Dahl, and Dan-Olof Rooth의 연구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 이들 학자들은 정치인이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거나 (James Stimson의 연구) 극단주의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면 (Carlsson et al.의 연구) 여론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설명.
- ◆ 따라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정반대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James Stimson가 말하는 'mood swing' 이나 Carlsson과 공저자가 말하는 '백래시 (backlash)'로 설명가능해 보임.
 - 미국의 경우, 보수적 정책은 진보적 정책에 대한 요구를 낳고, 진보적 정책은 보수적 정책에 대한 요구를 낳는 현상(mood swing)이 발견됨.
 - 스웨덴의 경우, 극우정당이 의석을 획득하면 극우적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극좌정당이 의석을 획득하면 극좌적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하는 현상(backlash)이 발생.
- ◆ 다른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때도 어느 정도 여론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트럼프의 경우는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적 스타일도 이전의 대통령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여론변화의 속도나 수준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트럼프 정책에 정반대
되는 여론의 증가는
'백래시' 현상으로 보여**

- ◆ 여론변화의 정확한 원인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든 중요한 점은 국민의 여론이 트럼프의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임.
- 다만 대외 정책은 원래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아 왔기 때문에 양호한 경제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핵심지지층의 지지가 계속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미국 국민의 여론과 괴리를 보이는 것이 당선에는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한반도 관련 미국 국민의 여론

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 2019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시키느냐 약화시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인의 70%가 초당적으로--공화당 지지자의 74%, 민주당 지지자의 70%, 무당파의 68%--미국이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시킨다고 응답하였음.²⁾
- ◆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온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인 10명중 7명꼴로 (69%) 주한 미군은 증가되어야 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12%는 주한미군의 증가를, 57%는 현 수준의 유지를 선호. 16%는 주한미군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3%는 철군을 선호.
-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지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높게 나타나서, 2018년 12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에서 실시한 한국 국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규모 납치를 예방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한미동맹을 꼽은 응답자가 36%, 주한미군을 꼽은 응답자가 20%, 미국의 핵우산을 꼽은 응답자가 7%로 광의의 한미동맹 (한미동맹 + 주한미군 +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 평화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3%에 달함.³⁾
 - 이러한 결과는 지난 4년간 한국의 안보상황이 개선되었거나(42%) 동일한 수준(30%)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음. 안보상황의 개선이나 안정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조사결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는 여전히 높게 나옴.

한미 국민들에게는 한미 동맹/주한미군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는 견해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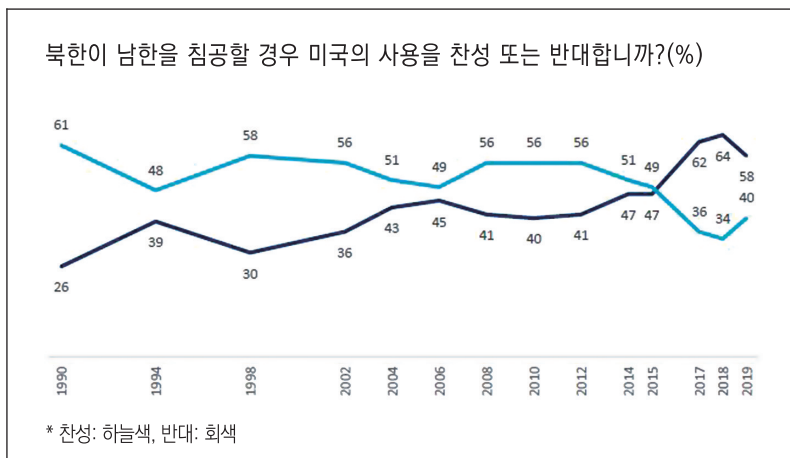
-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적어도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들 간에는 한미동맹/주한미군이 양국에 이익이라는 견해가 공통적으로 다수로서, 양국 국민들 간에는 한미동맹/주한미군의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해 이견의 소지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

나. 북한에 대한 대응

- ◆ 다음의 2019년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과반수(58%)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지를 표시.
 - 공화당 지지자의 63%, 민주당 지지자의 57%, 그리고 무당파의 56%가 미군의 사용을 지지함.
 - 미군 사용에 대한 지지율은 2017년에는 62%, 2018년에는 64%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도에는 58%로 다소 감소.

북한의 남침시 미군 투입에 대해 미국민 과반수가 초당파적으로 지지

〈북한의 남침 시 미군 사용에 대한 찬반 여론〉



출처: Friedhoff, Karl. 2019. "Americans Remains Committed to South Korea."

- ◆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1990년 26%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2019년의 58%는 대단히 높은 비율.
 -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한 2000년대 들어서도 40%를 맴돌던 미군 사용 지지율이 60% 전후까지 증가하게 된 것은 북한이 핵실험뿐만 아니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의 발사 실험에도 성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기대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높음. 2018년 12월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30%가 북한

의 남침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매우(very)' 확신한다고 답하였으며, 45%는 '다소(somewhat)' 확신한다고 답하였음. 즉, 한국인 응답자의 75%가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줄 것으로 기대.

-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할 경우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해서 남한을 지켜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무려 91%에 달했음.⁴⁾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적어도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들 간에는 북한의 남침 시에 미국이 한국을 지켜줘야 한다는 견해가 공통적으로 다수로서, 양국 국민들 간에는 이에 대해 이견의 소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

※ 예방공격에 대한 찬반 여론

◆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자 이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들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대응방안의 하나로 한국의 방어하기 위한 미군 사용에 대해 지지를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Alida Haworth, Scott D. Sagan, Benjamin A. Valentino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⁵⁾

◆ Haworth et al. 이 3천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다수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북한에 대해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 한편,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에는 69%의 응답자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서 북한에 대해 사후에 보복공격을 하는 것을 지지.

◆ 즉, 미국인들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미국 본토 타격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행위'(남한 침공)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지지.

◆ Haworth et al. 은 연구를 통해서 미국인의 약 1/3 정도가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지지하며, 예방공격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들의 선호도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

◆ 이들은 예방공격,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하고 많은 민간인이 죽을 수 있는 예방공격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 이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선호를 통해서 Haworth et al. 은 미국 국민들이 핵무기는 사용하면 안 된

미국인들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보다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을 지지

다는 ‘금기’에 대해 별로 민감하지 않고 적국의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민감하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

- ◆ 이들의 발견이 정확하다면 북한에 대한 예방적 공격,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한 예방적 공격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보이지는 않음.
 - 물론 응답자들은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것이고, 수적으로는 소수 (약 1/3).
 - Herbert J. Gans가 주장하였듯이 여론조사 결과는 진정한 의견을 반영한다기 보다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불과할 수 있음 (“Polls are answers to questions rather than opinions”).⁶⁾
- ◆ 하지만 대상을 바꾸어가며, 조건을 달리하며 물어도 응답자의 1/3 정도가 꾸준히 핵무기를 사용한 예방공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결과를 무시하기는 어려움. 만에 하나 만약 그들 중의 일부가 정책결정자가 된다면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한 예방공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대상과 조건을 달리 하여도 응답자의 1/3 정도는 꾸준히 핵무기를 사용한 예방공격을 지지

다.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철수

-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 2019년 1월말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미국의 분담금 증가 요구를 수용한 것에 반대한다고 대답. 26%는 미국의 분담금 증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찬성.⁷⁾
 - 미국의 분담금 증가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 대한 반대는 연령, 지역, 성별, 이념 등과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의 분담금 증가 요구의 수용에 대한 반대는 한국사회 저변에 넓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위협한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에도 방위비 분담 증가에 대한 반대가 5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찬성은 31%.
- ◆ 만약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과반수의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 요구를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추진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임.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시도에 대해 미국 국민의 호응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주요 국가와 지역에 주둔된 미군을 증가시키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 국민 과반수의 의견이기

때문.

- ◆ 2019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한국, 일본, 그리고 페르시아만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증가시키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대답.⁸⁾
 - 주한 미군을 증가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69%, 주일 미군을 증가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57%. 중동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증가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60%.
 - 주한 미국의 감축을 선호한 비율은 16%, 철수를 선호한 비율은 13%에 불과.

4.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국제무역이나 동맹에
대해 전례없이 높고
초당적인 지지여론을
대미외교에 활용할 필요**

- ◆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매우 비전형적인 스타일의 지도자가 집권하고 미국 국민들도 전례 없이 분열된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미래를 좌우할 외교가 전개되고 있음.
-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공격적 일방주의 외교에 가려서 그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의 여론은 ‘국제주의의 강화’로 향하고 있음. 미국 국민들은 국제무역이나 동맹체제에 대해서 전례 없이 높고 초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음.
- ◆ 우리가 소망하는 과정과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면 미국의 여론을 우리 공공외교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여론이 정부의 정책이나 선거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정책이 있을 수도 불리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음.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의 여론 중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음.
- ◆ 성공적인 대미 외교란 정부 간 외교를 통하여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을, 공공외교를 통하여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간 외교에 추가하여 적극적인 공공외교도 필요.
 - 다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적극적인 공공외교, 특히 적극적인 정책 공공외교는 ‘외국정부에 의한 국내여론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

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가. 엘리트 대상 공공외교의 한계⁹⁾

- ◆ 그간의 우리나라의 대미 공공외교는 주로 엘리트, 특히 대학 캠퍼스와 워싱턴 내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국 우수 대학에서 한국학 진흥과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서 한국연구 증진을 지원하여 왔음.
 - 워싱턴 내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워싱턴 사무소, 한미경제연구소 (KEI), 그리고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한미연구소(USKI)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공공외교를 수행하여 왔음.
- ◆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대미 공공외교는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엘리트와 미국 일반 국민 간에 간극 (disconnect)이 전례 없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엘리트, 특히 대학 캠퍼스와 워싱턴 싱크탱크를 통해서 미국 일반 국민의 생각을 읽어낸다든가 미국의 일반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음.
- ◆ 여론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들도 미국의 국제적 역할, 국제무역, 동맹체제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도 형성하기 시작했음. 즉, 미국 국민들이 이제는 문화나 지식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정책 공공외교의 대상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음. 문제는 그동안 미국의 일반 대중은 우리의 대미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접근하거나 그들을 활용하는 공공외교 전략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임.

그간 일반 대중은 공공외교의 주대상이 아니었고 소통전략도 개발되지 않아

나. 대중 대상 공공외교의 모색

- ◆ 인터넷의 발달과 포퓰리스트적 정치인의 출현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 정치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음. 일부는 주요언론이나 전문가의 견해보다는 인터넷을 떠도는 fake news를 더 신뢰하며, 워싱턴 엘리트는 부패한 특권층이라고 경멸하면서 인터넷을 통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과 견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음.
 -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기존의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Pew Research Center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31%가 언론인들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5%만이 언론인들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¹⁰⁾

**공화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접근도
어려워**

- 공화당 지지자들의 64%만이 CNN 이나 NYT 같은 전국적 언론매체로부터 얻는 정보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다고 응답.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는 86%가 신뢰감을 갖는다고 응답.

◆ 미국의 일반 국민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50개주의 도시와 농촌에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워싱턴이나 대학 캠퍼스,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수행해온 전통적 공공외교 사업이나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일반 국민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언론매체에 대한 불신감이 높기 때문.

◆ 따라서 미국의 일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필자는 '디지털 공공외교'를 제안하고자 함.¹¹⁾ 디지털 공공외교는, 공공외교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상대국 일반 국민의 인식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의 의도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디지털 공공외교는 전통적 공공외교 대비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음.

- 엄밀하게 말하면 디지털 공공외교의 최적의 대상은 젊고 고소득, 고학력, 도시 및 교외거주자.

- 만약 전략적으로 특정 집단을 타겟팅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여 디지털 공공외교를 할 경우,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주로 젊고, 고학력, 중상류층 이상, 도시 또는 교외지역에 거주, 영어 사용하는 아시아계 또는 백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음.

◆ 디지털 공공외교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공외교의 활용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대중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사용도 이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국 전역에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는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

- 2015년 현재, 성인인 미국인의 65퍼센트가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인터넷의 경우는 성인의 84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잘 활용한다면 최대 84%의 미국인에게, SNS를 잘 활용한다면 최대 65%의 미국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퍼센티지가 되겠지만 전통적인 공공외교 사업이나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접근 대상이 증가한 것임.

- ◆ 디지털 공공외교를 통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가능한 한 그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
 - text를 기반으로 한 트위터,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동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관계에 기반한 페이스북, 개인화가 용이하고 방문자와 작성자 간 소통이 가능한 블로그, 그리고 전통적인 웹사이트 등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면 짧은 시간 내 다수의 대상을 상대로 메시지 전달과 이미지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
- ◆ 하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첫 단계는 우선 그들을 경청하는 것이 될 것임. 사이버 공간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가 생성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훌륭한 데이터를 제공. 오히려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될 것임.
 - ‘빅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홍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인들의 생각과 견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하지만 아직 기존의 공공외교 행위자들은 빅 데이터 분석에 대해 관심이 깊지 않고 설사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 경청의 단계를 넘어서 소통을 할 경우, 문제는 과연 누가 그러한 소통을 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임. 김상배 교수는 외교관이 소셜 미디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외교조직의 속성 간에는 “태생적이 모순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¹²⁾ 이 주장이 맞는다면 외교관은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에 있어서 최적의 행위자는 아닐 수 있음.
- ◆ 달리 말하면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에 있어서 궁극적인 도전과제는 정보통신기술의 습득과 활용이 아니라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에 적합한 ‘조직’과 ‘문화’의 창출이 될 것임. 당분간은 공공외교 수행주체--외교부, 주미 대사관,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재단 워싱턴 사무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
 - 일본 사사카와재단 워싱턴 사무소가 Nelson Report 발행인인 Chris Nelson을 영입한 것처럼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디지털 공공외교의 수행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 미국은 지난 번 대선을 계기로 엘리트와 대중 간,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해서 국

**궁극적 도전과제는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에
적합한 ‘조직’과 ‘문화’의
창출**

제질서에서부터 한반도 정세까지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가려서 잘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주의적 여론이 강화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음.

워싱턴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도 소통하는 새로운 공공 외교를 모색하여야

- ◆ 이러한 새로운 현실--국제주의의 부활 속에서 엘리트와 대중 간 간극 증가, 미국 정치의 양극화 속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고 있는 대중의 등장--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워싱턴 엘리트 중심의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미국 일반국민들이 갖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도 소통하는 새로운 공공외교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정치인들은 미국 국민의 선호를 외교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므로, 미국 국민의 국제주의적 선호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생각을 활용하는 대미 공공외교가 요구됨 .

참고문헌

김상배. 2012. “소셜미디어와 공공외교.” 『국제정치논총』 제52집 2호. 117-142.

한인택. 2018. “미국내 여론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2016.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의 전략과 과제.”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방화 연구』, 한국국제교류재단

Bialik, Kristen. 2018. “5 facts about how the US and its allies see North Korea.” Pew Research Center.

Carlsson, Magnus, Gordon B. Dahl, and Dan-Olof Rooth. 2015. “Do Politicians Change Ppublic Attitude?” *NBER Working Paper* 21062. <http://www.nber.org/papers/w21062>

- Friedhoff, Karl. 2019. "American and South Korean Publics Doubtful about Success of Talks with North Kore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Friedhoff, Karl. 2019. "Americans Remains Committed to South Kore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Friedhoff, Karl. 2019. "South Korean Public Ready to Call Trump's Bluff."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Friedhoff, Karl, Dina Smeltz, J. James Kim, Kang Chungku, Scott A. Snyder. 2019. "Cooperation and Hedging: Comparing US and South Korean Views of Chin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Haworth, Alida, Scott D. Sagan & Benjamin A. Valentino. 2019. "What do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conflict with nuclear North Korea? The answer is both reassuring and disturbing."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5:4. 179-186
- Helm, Brendan, Dina Smeltz, and Alexander Hitch. 2019. "Record Number of Americans Say International Trade Is Good for the US Economy."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Pew Research Center. 2015. "Americans' Internet Access: 2000-2015 As internet use nears saturation for some groups, a look at patterns of adoption."
- Pew Research Center. 2017. "The Partisan Divide on Political Values Grows Even Wider: Sharp shifts among Democrats on aid to needy, race, immigration."
- Pew Research Center. 2018. "Conflicting Partisan Priorities for U.S. Foreign Policy: Terrorism, protecting U.S. jobs top the public's agenda."
- Pew Research Center. 2019. "Trusting the News Media in the Trump Era: Partisan dynamics overshadow other factors in Americans' evaluations of the news media."
- Smeltz, Dina, Ivo Daalder, Karl Friedhoff, and Craig Kafura. 2016. "America in the Age of Uncertainty: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Smeltz, Dina, Ivo Daalder, Karl Friedhoff, Craig Kafura, and Brendan Helm. 2019. "Rejecting Retreat: Americans Support US Engagement in Global Affairs."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Smeltz, Dina, Ivo H. Daalder, Karl Friedhoff, Craig Kafura, and Lily Wojtowicz. 2018. "America Engaged: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Smeltz, Dina, Karl Friedhoff, and Lily Wojtowicz. 2019. "South Koreans See Improved Security, Confident in US Security Guarante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주 석

- 1)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 대선에서 여당후보의 당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 향후 경제상황의 큰 변화가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위해 유리한 고지를 일단 확보한 상태.
- 2) Friedhoff, Karl. 2019. "Americans Remains Committed to South Kore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3) Smeltz, Dina, Karl Friedhoff, and Lily Wojtowicz. 2019. "South Koreans See Improved Security, Confident in US Security Guarante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4) Bialik, Kristen. 2018. "5 facts about how the US and its allies see North Korea." Pew Research Center.
- 5) Haworth, Alida, Scott D. Sagan & Benjamin A. Valentino. 2019. "What do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conflict with nuclear North Korea? The answer is both reassuring and disturbing."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5:4. 179-186
- 6) Gans, Herbert. 2013. "Public opinion polls do not always report public opinion." <https://www.niemanlab.org/2013/04/public-opinion-polls-do-not-always-report-public-opinion/>
- 7) Friedhoff, Karl. 2019. "South Korean Public Ready to Call Trump's Bluff."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https://www.thechicagocouncil.org/blog/running-numbers/south-korean-public-ready-call-trumps-bluff>
- 8) Smeltz, et. al. "Rejecting Retreat: Americans Support US Engagement in Global Affairs." p. 35.
- 9) 이 절의 내용의 일부는 다음을 바탕으로 하였음. 한인택. 2018. "미국내 여론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 10) Pew Research Center. 2019. "Trusting the News Media in the Trump Era: Partisan dynamics overshadow other factors in Americans' evaluations of the news media."
- 11) 이 절의 내용의 일부는 다음을 바탕으로 하였음. 한인택. 2016.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의 전략과 과제"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방화 연구』 한국국제교류재단
- 12) 김상배. 2012. "소셜미디어와 공공외교." 『국제정치논총』 제52집 2호. 117-142.

❖ 저자 약력

■ 한인택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겸 제주포럼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UC, Berkeley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UC, Davis, University of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에서 강의. 핵전략, 안보협력, 공공외교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모색: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과학적 공공 외교"와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등의 저술이 있음.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于婉莹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제 제기

- 한국과 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 국가로서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왔으며, 1992년 수교 이후 1990년대 중국과 수교한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발전된 양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0년 한중 양자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현재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임. 2013년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고 2015년 한중 FTA 달성했지만 그 이후로 사드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신속하게 냉각되면서 아직까지도 회복세가 눈의 띄게 보이지 않음.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거의 10년간 양국관계는 공식적으로 격상된 바 없음. 한때 뜨거웠던 한중관계는 거의 원상 복귀의 수준임.
- 우선, 한중관계를 둘러싸고 몇 가지 질문 제기할 필요 있음. 첫째, 한중 관계가 왜 경제무역 의존도가 높고 활발하지만 양국 정치적 관계는 정체되고 국민 간 친근하지 않는가? 둘째, 한중 관계는 왜 제3국과 관련된 문제의 영향에 취약한가? 셋째, 한중일 3국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지만 왜 3국 간 상호 신뢰가 낮고 유럽처럼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신뢰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 신뢰는 타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타국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움.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됨.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도 여러 요인에 작용되고 변화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에 탄 것과 같은 한중관계가 '밀월기'와 '슬럼프'를 연속 거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 있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양국의 긍정적 인식의 형성과 오해 해소를 위한 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목 차

◆ 문제 제기

1. 한국의 이미지 관련 조사 : '근이불친(近而不亲)'의 한중관계
 - (1) 한중일 상호 인지조사 (2018)
 - (2) 통일연구원의 『동북 아문화공동체 토대 연구: 중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관련 조사
 - (3) 한국 이미지에 대한 개별 설문조사
 - (4) 기타 조사 결과
2. 중국의 대한민국 인식 변화의 배경
 - (1) 국력의 변화와 자신감의 증대
 - (2) 한국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경로의 증대
3. 한중 양국 신뢰 구축을 위한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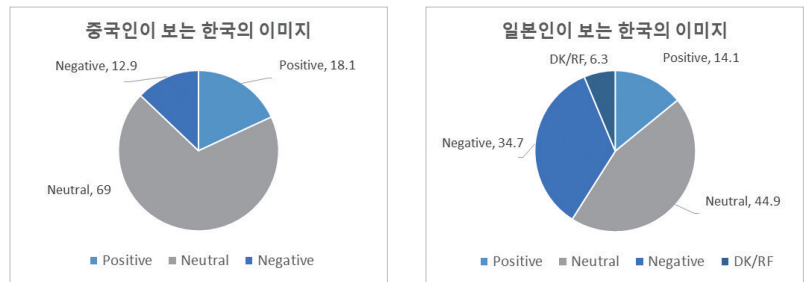
1. 한국의 이미지 관련 조사 : ‘근이불친(近而不亲)’의 한중관계

(1) 한중일 상호 인지조사(2018)¹⁾

한중일 3국 응답자는 서로에 대한 친밀도와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 한 전문 여론조사기구는 2018년 한중일 3국 국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한중일 상호 인지조사’ 진행함. 중국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8년 7월 12~31일까지 중국의 10개의 주요도시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국 응답자의 답변을 통해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음.
- ‘이웃 국가에 대한 인식’에서 한중일 3국 응답자는 서로에 대한 친밀도와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 원인은 ‘역사영토 문제’, ‘정치적 충돌’ 및 ‘경제적 이익 차이’ 등에 집중됨. 일본의 응답자는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24.2%로 가장 낮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56.4%으로, 일본에 대한 신뢰도 51.7%보다 높음.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39.5%로 일본에 대한 친근감 30.7%보다 높음. 이와 반해 한일 응답자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각각 24.2%, 31.4%로 나타남.
- 보고서에서 “한국/일본/중국을 언급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질문에 응답자의 다수 중성적인 이미지를 언급하였고 그다음은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는 적음.

〈그림-1〉 귀하께서는 한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출처: 유관 조사결과 내용 인용.

- 한국을 언급할 때, 중국 응답자 중의 69%와 일본 응답자의 44.9%가 중성 이미지, 즉 ‘한식’, ‘성형’, ‘미용과 화장품’, ‘기업과 제품’ 등 언급함. 중국 응답자는 일본 응답자보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게 나타남. 중국 응답자 중 12.9%, 일본 응답자 중 34.7%가 ‘역사 갈등’, ‘사회 부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표-1〉 한중일 3국 상호 인지 조사: 중국인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

중국인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		%
긍정적	한류-연예인, 드라마, 아이돌그룹	14.1
	기타 적극적인 이미지	3.4
	기술과 경제 발전	0.6
중성	성형, 뷰티, 화장품	21.8
	기타	18.9
	한식	15.9
	한국기업과 제품	6.6
	여행, 도시, 운동	5.7
부정적	기타 부정적 이미지	7.1
	사드문제	3.8
	전대통령 탄핵, 북한	2.0

*출처: 유관 조사결과 내용 인용.

- 응답자 중 60대와 비교할 때 젊은 20대의 상대 국가에 대한 친근감이 더 높았고 특히 일본에 대한 친근감으로 나타남. 보고서에서 3국 젊은 세대는 상대국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밝힘.
-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중국 응답자 중 44.3%가 한중일 3국은 '상호 보완의 관계'로 답변하였고 43.1%는 '상호 경쟁의 관계'로 답변하여 한일 양국과 비해 3국이 보다 협력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함. 일본 응답자 중 13.3%만 3국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답변했고 29.1%의 응답자는 '상호 경쟁의 관계'로 답변함. 전체적으로 3국은 상호 보완 관계보다 경쟁 관계를 지향한 것으로 인식함.
- 3국 응답자는 대부분 한중일 3국은 모두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나 영토 관련 이슈 등과 개별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3국 협력의 지속'에 동의하며 가장 협력이 필요한 영역은 '오염방지', '경제협력' 등으로 인식함.
- 3국 응답자의 44.8%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기타 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답변함. 그 중에서 중국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획득이 60%이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응답자 중 60세 이상의 58.2%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정보를 접하지만 이와 비해 한국과 일본의 60세 이상 응답자는 각각 15.4%와 11.5%로 나타남. 한국 응답자중 60대 이상 TV를 통해 중국과 일본 관련 정보를 접하는 자는 59.9%, 중국은 29.9%로 나타남. 인터넷과 이동통신 수단의 발전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에 관련한 정보를 접하는 방식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남.

**인터넷과 이동통신
수단의 발전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에
관련한 정보를 접하는
방식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남**

(2) 통일연구원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연구: 중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관련 조사

◆ 이 조사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한중일 3국 전문가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동북아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서면 인터뷰임. <표-2>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국의 ‘협한’ 수준과 ‘협일’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 나타남.

<표-2> 중국의 협한과 협일 수준

중국의 혐오 수준	중국에서의 협한	중국에서의 협일
(1) 매우 심각	0(0.0%)	3(15.0%)
(2) 어느 정도 심각	2(10.0%)	11(55.0%)
(3)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16(80.0%)	5(25.0%)
(4) 전혀 심각하지 않음	1(5.0%)	0(0.0%)
*심각함=(1)+(2)	2(10.0%)	14(70.0%)
*심각하지 않음=(3)+(4)	17(85.0%)	5(25.0%)
합계(명)	20(100.0%)	20(100.0%)

*통일연구원,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연구: 중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p.147.

**협한'문제의 해결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문제와 기타 문제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

- 중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의 ‘협일’ 수준이 중국의 ‘협한’ 수준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총 17명의 응답자는 중국에서의 ‘협한’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4명의 응답자는 중국의 ‘협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 중국에서의 ‘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현재의 협한문제의 주 원인을 사드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협한’문제의 해결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심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문제와 기타 문제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중 간은 과거에 경제적 협력을 위주로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청소년 교류, 학술적 논의, 유학생 상호 파견 등 양국 사회 전반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 있음.
- 중국에서의 ‘협한’이 나타나는 배경, 원인,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해를 통해 양국 언론의 보다 객관적인 보도를 추진해야할 것을 주장하고 인터넷에서의 개인적인 부정적인 목소리를 정부의 입장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제3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분단의 역사, 일본에 의한 식민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한국의 민족적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도록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함.

(3) 한국 이미지에 대한 개별 설문조사

◆ 한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에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한국인의 이미지가 중국에서 어떤 수준이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가 어려움. 다양한 요인(관광목적, 연령, 업종, 거주지 등)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놓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개괄하기 어려움. 비슷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접하는 정보나 한국인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20~60대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별(남, 여), 연령대(20대에서 60대), 직업(공무원, 기자, 대학생, 교수, 회사원), 거주지(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창춘, 칭다오, 심타이), 한국어 가능여부(숙련, 초보, 불가), 한국 방문여부(거주, 방문 경험 있음, 방문 경험 없음)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함.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중국인 총 10명을 대상으로 8개의 질문을 통해 진행.

- 우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화장품’, ‘친절함’, ‘예의 바름’, ‘깨끗한 환경’, ‘전통문화’, ‘드라마’, ‘한식’, ‘편의한 생활’ 등으로 나타나고 부정적 이미지로는 ‘언어 소통 불편’, ‘사회적 압력’, ‘사드문제’, ‘역사문제’, ‘한국 정당 경쟁’, ‘연예계 추문’, ‘국방 자주권’, ‘선후배 위계질서’, ‘포용성이 약하고 비교적 배타적’ 등 다양한 답변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 한국어 불가하거나 한국 단기 관광으로 방문한 자는 한국의 대중국 호감도에 대해 ‘비교적 높음’, ‘괜찮음’,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한국에서 거주 경험이 있는 대상은 ‘양면적’, ‘일본보다 좋음’, ‘복합적’ 등으로 인식함.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다각적인 측면이 나타남.
- 비교적 많이 언급된 내용은 ‘전통문화의 보호와 홍보’로 나타남, 한중 간 문화 분쟁이 존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통 문화 영역에서 한국의 보호, 활용 및 홍보에 대해 인정한 입장임.
- 사드문제에서의 한중 간 입장 차이 비교적 많이 언급함. 사드는 한중관계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군사국방 영역에서 미국에 의지하여 독립적인 국방권이 없음으로 미국에 종속된 이미지로 인식함.
-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둔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언급함. 한중 양국은 이웃하면서도 친하지 않는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 지정학적으로 미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 국가의 정치, 경제 이익도 영향을 미치며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입장, 중립적 입장, 낙관적 입장 모두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다각적인
측면이 나타남**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과거보다 심화되는 추세로 나타남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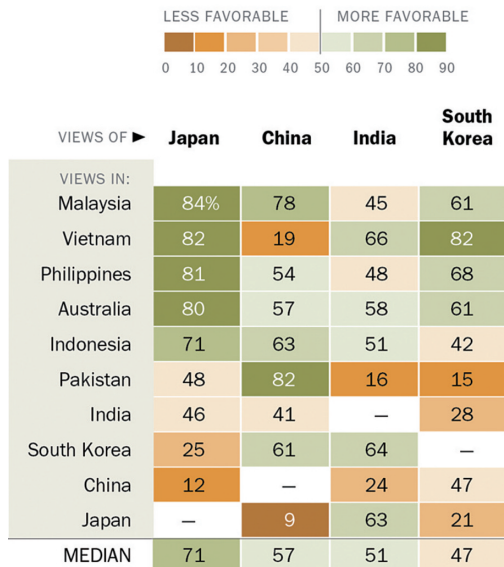
- 한국 관련 정보의 획득에 있어 대부분 응답자의 경우 인터넷, 드라마, TV 프로그램, 가족과 지인을 통한 접근, 그리고 한국인과 직접적으로 접한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등으로 나타남. 직접적인 접촉과 간접적인 인터넷을 통한 한국을 이해하는 방식이 주류를 형성되고 이것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경로임.
- 한국 드라마와 영화, TV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아직도 매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드라마, 영화 제작 및 한류의 전파 등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 있음.
- 한국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마다 다양한 화상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과거보다 심화되는 추세로 나타남.

(4) 기타 조사 결과

-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15년 아시아 국가 상호 호감도 조사에서 중국은 주변 대다수 국가들과 거리상으로 가깝지만 친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줌.²⁾

〈그림-2〉 아시아 국가 상호 호감도

Asians' Views of Each Other



Source: Spring 2015 Global Attitudes survey, Q12b, g, i, r.

PEW RESEARCH CENTER

*출처: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s Survey", 2015.

- 일본의 민간 비영리 단체 '언론 NPO'는 2016년 중국과 한국의 싱크탱크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한중일 3국의 여론 조사 결과 발표함. 그 결과 한국이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중국인 응답자는 34.9%로 전년대비 약 20% 떨어진 반면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61.1%로 전년대비 20% 넘게 높아져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미국이 7월 한국에 사드배치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드'가 국민 정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³⁾

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배경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배후에는 여러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한 것이며 중국의 인식 변화는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호작용한 결과임.

(1) 국력의 변화와 자신감의 증대

- 최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2017년 이후 사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 심층적으로 중국의 국력의 신장에 따라 자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09년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의 타격을 면했으며, 2010년 일본을 초월하여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 등 모두 중국의 국력의 증대를 확립함.
- 2008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표한 '한중일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중일 3개국 중 국가 자부심이 가장 강한 나라는 중국인이 93.6%로 나타나고, 한국인 응답자 중 '자랑스럽다'로 답변한 자는 8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3국 응답자 중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자도 한국인이 가장 많음.⁴⁾
- 2014년 9월 중국 『런민일보(人民日报)』에서 “중국은 자신 있어야 한다”라는 문장 게재됨.⁵⁾ 2016년 7월 중국공산당 창립 95주년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4개의 자신(四个自信)', 즉 '중국특색사회주의 도로자신, 이론자신, 제도자신, 문화자신'을 내세우면서 “문화적 자신의 보다 기초적이고 폭넓고 깊은 자신감”의 지위를 강조함. 이러한 자신감은 중국공산당, 중국 정부만의 담론의 수준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 국민의 자신감의 증대로 이어짐.
- 선진국과의 국력 차이가 축소되고 세계와의 접촉도 많아지면서 점차 시

심층적으로 중국의 국력의 신장에 따라 자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여전히 주변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범위가
더욱 큰 아시아 국가
라는 정체성이 강해짐**

야를 더 넓혀가는 과정임.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외교적 인 '유소작위(有所作为)'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상승과 자신감을 보여 줌. 여전히 주변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범위가 더욱 큰 아시아 국가라는 정체성이 강해짐.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제기 후 주변국, 나아가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고,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 단계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격상시키는 등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를 이미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중국의 제의 하에 설립된 AIIB는 다수의 아시아 국가와 서구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고 2016년 항저우 G20의 성공적인 개최는 신시기 중국의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또한 중국의 자신감,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강대국이라는 인식을 크게 증진시킴. 최근 등장한 '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등 중국의 외교 담론도 국제 사회에서의 자신감의 증대를 기반으로 함.

- 미국의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갤럽(Gallup)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전 세계 지지도는 34%, 미국은 31%로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미국을 추월함.⁶⁾ 자신감은 높아졌지만 중국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발전도상 중의 대국이고 패권을 추구하는 능력과 의지 모두 없음을 표명함. KBS에서 2015년 7부작 다큐멘터리 '슈퍼차이나'를 방영 후 한국과 중국에서 화제로 급부상함. 중국의 발전 현황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소개하며 중국의 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줌.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중국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짐. 중국의 강력한 국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한국 국민들이 경계와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한국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경로의 증대

- 과거에 뉴스, 드라마와 한류를 위주로 하는 대한국 인식 형성에서 현재 한국 관련 정보를 더욱 다각적인 수단으로 접할 수 있음. 즉 한국 유학, 거주, 단기교류, 관광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직접 방문을 통한 이해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언론, SNS를 통한 이해가 가능해짐. 더욱 신속하고(한국과 중국에서 거의 최신 뉴스를 공유할 정도로 전파력이 신속)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언론의 보도의 방향과 내용에 의해 오도되거나 네티즌의 개인정서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짐.

1) 정치외교 관계의 발전 및 경제무역의 의존성

- 양국 간 관계는 국민간의 친근감에 자극할 수 있음. 한중 양자관계는 오

랫동안 ‘정냉경열(政冷經熱)’로 평가받은 것처럼 경제적 협력이 활발하게 발전해 왔지만 정치, 군사적 협력과 신뢰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임. 비록 한중 양자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정부, 민간 등 여러 차원의 대화 채널이 구비되어 있지만 정치, 군사 영역의 관계는 아직도 한계가 있음.

- 한중 양자 간에 역사문제를 제외하고 사실 직접적인 충돌과 갈등은 없지만 제3국의 영향에 취약한 한중관계는 한미동맹, 한미군사훈련, 북핵문제 등 여러 가지 한중 간 공동으로 직면한 외적 변수들이 존재함.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침. 한미군사훈련, 사드의 경우 중국은 그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판단되고 강력하게 반응해 왔음. 사드문제는 한중관계의 시금석임. 여기서 한중 간 근본적인 인식 차이 존재함. 한미동맹의 경우 과거의 ‘냉전의 유산’의 인식으로부터 점차 한반도 평화의 유지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인정하고 한중관계,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때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일 동맹’의 형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 보여줌.
-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자원, 노동력 자원, 산업구조 등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하여 경제 교류와 무역협력이 좋은 자연조건과 객관적인 우위 조건 있음. 2015년 양국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한 후 한중 교역은 2016~2017년 사드문제로 소폭 하락한 뒤 2018년부터 소폭 회복 추세 나타나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제4대 최종 수출국, 중국은 한국의 1위 수입국이자 수출국 유지함. 한국과의 교역의 확대를 통해 중국인은 한국산 제품과 기술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한국 자동차, 전자제품, 화장품 등에 대한 선호도도 높음.
- 최근 한국의 해외 수출품 전체로 보면, 기전제품, 운송설비, 금속 등 제품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며 화장품, 스킨케어 등으로 대표되는 화공품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5대 수출품목의 국별/지역 구성을 보면 상위 5개국 중국은 4개 품목에서 1위 차지함. 한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의심할 필요 없음.
- 2018년 한국은 세계 하이테크 제품 수출 5위를 기록함. 수출 품목 수출 대상국을 보면 아시아권 특히 중국 및 홍콩 반도체 수출 비중이 5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주요국의 하이테크 수출품목 구조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전자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과학기기 등 정보기술(IT) 및 정밀기기의 비중이 90%를 넘음.⁷⁾ 이로 인해 한국에서 중국 의존에 대한 위험도 제기되고 있음.

**사드문제는 한중관계의
시금석임. 여기서 한중
간 근본적인 인식 차이
존재함**

인적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는 상대국을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2) 인적교류의 확대: 관광, 유학을 중심으로

- 한중간 수교 기간이 짧고 인적 교류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 교류를 촉진하는데 문제점도 많다. 인적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는 상대국을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적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광, 유학 분야의 인적교류 성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 한중 관광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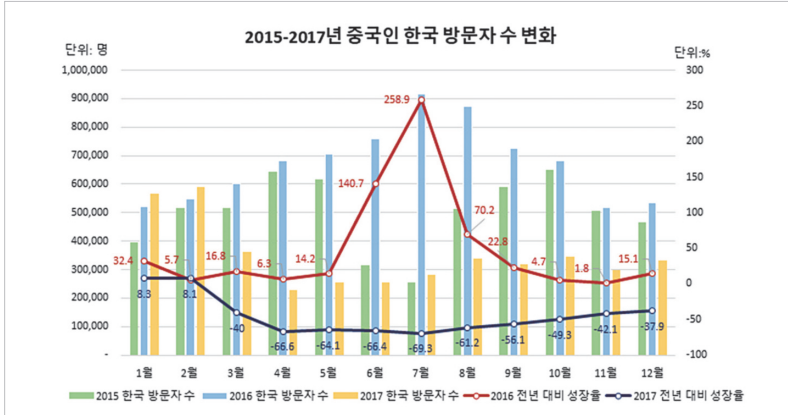
- 2014년 처음으로 한중 상호 방문 여행자 수 1000만명 시대로 들어서고 2013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선후로 상호 방문하여 '한중 관광의 해' 개최하기로 공동 선언함. '중국 관광의 해' 동안 중국은 총 120여 건의 한중 관광 교류 행사를 설계함. 관광의 해는 양국간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함.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항전승리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여 양국 관계가 전례없이 좋아짐.

◆ 사드로 인한 관광객 수 폭락

-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국방부는 롯데그룹의 성주 골프장을 사드 최종 배치 지점으로 확정하고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에서 사드 배치 부지 제공하기를 결정한 후 한중관계는 전면적으로 악화하기 시작함. 중국 외교부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대중들 간에서도 논의되는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중국 국내 여론은 일변도로 한국을 비난함.
- 2017년 3월 3일 국가 관광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출국 위험을 자각하고 여행 목적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주의를 제시하면서 한국 여행은 여행 전에 반드시 성실하고 전면적으로 한국 입국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고 공지함.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 관광 주관 부서가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하는 등 금지령을 내린 것을 부인함. 그러나 그 이후로 중국의 각 여행사에서 한국 관광제품과 광고가 제공되지 않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상태임.
- 중국의 한 유명 여행기관이 2017년 발표한 '2017 중국 여행 희망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인 관광객 중 31%가 안전에 가장 관심이 많고, 환경 요인은 25%, 15%의 여행자는 여행 목적지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조사 결과에 의하면 1.4%의 응답자만 한국 여행을 희망해 한국은 중국 관광객 선호 목적지 16위로 지난해보다 13위 떨어졌고,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호감도 급감으로 나타남.⁸⁾
- 사드 이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현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2015년 6월, 7월은 메르스(MERS) 영향으로 한국 방문자 수 잠시 하락세 보여줌.

2016년 7월 전년대비 성장률이 최고로 258.9%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해 옴. 2017년 3월부터 급하락 추세 나타나면서 전년대비 최대 69.3% 하락함.

〈그림-3〉 2015년~2017년 중국인 한국 방문자 수 변화



*출처: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중국인의 새로운 관광 목적지 일본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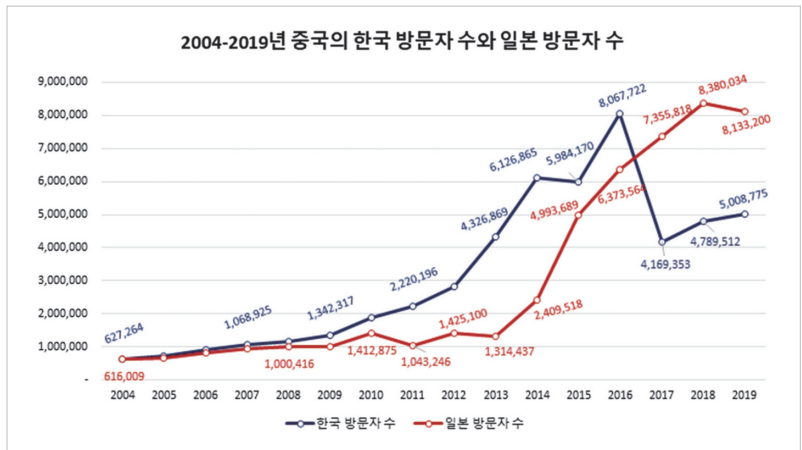
- 2010년과 2012년 중일관계가 다오위다오(钓鱼岛) 문제로 갈등이 고조될 때도 중국 방일 관광객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적 있음. 2012년 '다오위다오 국유화' 사건 직후 2012년 10월 중국의 일본 방문자는 69,631명으로 그 중 관광객 수가 21,04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 대비 60.3% 감소. 2010년 중국 일본 방문자 수 월 성장률이 최고 183.4%(6월)를 기록했다가 9월 다오위다오 사건으로 인해 하락세 나타났고 관광객 11월에 전년대비 35.2% 감소함.⁹⁾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 2016년 한국 방문 관광객 초과하고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관광 목적지로 부상. 일본국가여유국 (JNTO)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중국인 관광객 수는 73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중국인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비해 더 부정적이지만 2012년 이후 일본을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 일본정부관광청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5년 연속 일본 방문 관광객 1위 유지함. 2019년 상반기 중 중국 내 관광객은 453만 2500명으로 전체 일본 방문 관광객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함. 중일 관계의 긴장은 사실 국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요인으로 양국 간 갈등은 있지만 국민 간의 교류에는 큰 지장이 없었음. 소득 증가와 관광 소비의 업그레이드 추진, 비자의 간소화, 항공편 증편, 높은 여행 만족도 등에 비롯됨. 방일 관광객의 성장에 힘입어 비자 완화 정책을 여러 차례 추진했고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9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8일 중·일 간 사

중일 관계의 긴장은 사실 국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요인으로 양국 간 갈등은 있지만 국민 간의 교류에는 큰 지장이 없었음

**한중관계가 사드로
인해 악화된 후
한국대신 일본을 찾는
것도 중요한 원인임**

이에 매주 정기 항공편은 1406개 개설한 것도 관광객의 급등 원인중 하나이다. 중국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여행의 경제적 부담 능력도 갈수록 높아져 해외 여행도 흔한 여가생활이 돼 가고 있음. 그러나 해외로 나갈 때 시간,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까운 나라를 택할 게 분명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아주 좋은 선택으로 부상함. 특히 언급해야 한 것은 한중관계가 사드로 인해 악화된 후 한국대신 일본을 찾는 것도 중요한 원인임.

〈그림-4〉 2004~2019년 중국의 한국 방문자 수와 일본 방문자 수 변화 추이



*출처: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2019년은 10월까지의 데이터)

- 사드 갈등 이후 2018년부터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은 완만한 회복세 나타남.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79,891명으로 전년대비 49% 늘었음.
-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들의 확대에 따라 중국인은 한국, 한국인을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많아짐. 여행 과정에서 한국을 보고, 듣고, 한국의 교통, 음식, 쇼핑, 레저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과거의 한국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한국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됨. 한국은 이제 드라마 속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더욱 입체적인 이미지로 중국 대중들에게 받아들이고 있음. 그러나 저가 단체여행 등으로 인해 한국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례가 많음. 이로부터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가능성 있음.

◆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인 체류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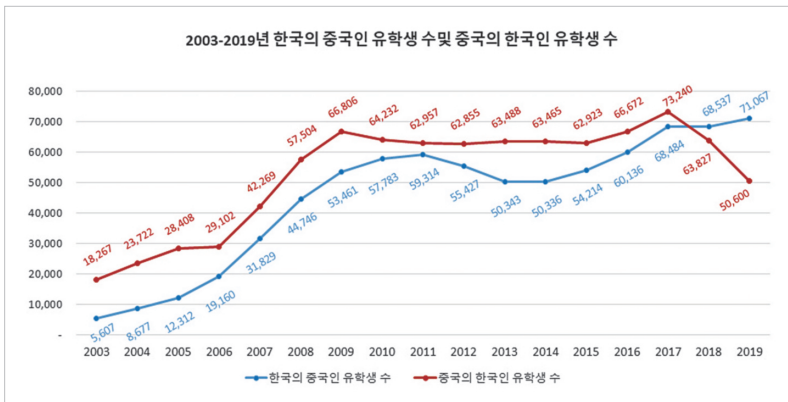
- 2018년도 중국에서 해외유학을 하는 학생은 66만 2,100명으로 1978년

**미국, 영국 등 국가는
여전히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목적지이지만 한국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도 아주 큰 비중
차지함**

부터 2018년 말까지 전체 해외유학생 수는 585만 7,100명임. 이 중 153만 3,900명이 해외에서 학습과 연구를 진행중임.¹⁰⁾ 미국, 영국 등 국가는 여전히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목적지이지만 한국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도 아주 큰 비중 차지함. 한국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중국인 유학생수 7만명 돌파, 전체 유학생수의 44.4% 차지함. 중국에서 발표된 '2017년 유학 해외유학 인재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유학 귀국한 중국 유학생 대졸 초임은 국내 동등 학력의 대졸자 평균보다 17.2% 높음으로 중국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음.¹¹⁾ 그러나 역시 양국 관계 영향으로 2017년부터 한국 유학 중국인 유학생 수가 하락하는 추세 나타남.

- 한국 유학열이 나타나면서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함. 특히 최근 한중간 흥행한 불법 다이거우(代购), 초단기 속성 박사과정 등으로 한국 유학의 질에 대한 질의도 나타나고 있음. 이는 다시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취업이나, 귀국 취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2018년 한국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떠난 중국인 유학생은 3,636명이었으나 2013년 1,906명으로 5년 새 거의 두 배로 늘어남. 중국 국내 일부 직업과 직장에서 박사학위는 '강제조건'인 동시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 대학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한국 박사학위과정은 비교적 완전한 산업시장이 형성됨.¹²⁾

〈그림-5〉 2003~2019년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수 및 중국의 한국인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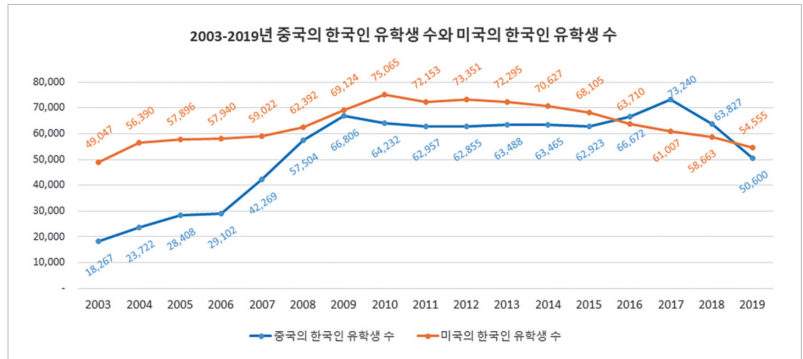
*출처: 한국 교육부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2018년에 196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총 492,185명이 중국 31개 성의 1004개 대학에서 공부 진행 중. 국적으로 볼 때 한국인 유학생이 50,6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파키스탄 유학생 28,608명, 인도 유학생 28,023명 미국 유학생 23,198명, 러시아 유학생 20,996명으로 나타남.¹³⁾ 2018년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이 총 220,930명 중

매년 한중 간 상대 국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들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매개로 됨

63,827명이 중국에서 유학함으로써 전체에서 28.9%를 차지함. 한국에서 중국 관련 수요가 많아지자 한국에서 ‘중국어열’과 ‘중국유학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2016과 2017년 중국의 한국인 유학생수가 66,672명으로 미국을 초과하여 한국의 가장 큰 유학 대상국으로 부상함.¹⁴⁾ 이처럼 매년 한중 간 상대 국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들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매개로 됨.

<그림-6> 2003~2019년 중국의 한국인 유학생 수와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 수



*출처: 한국 교육부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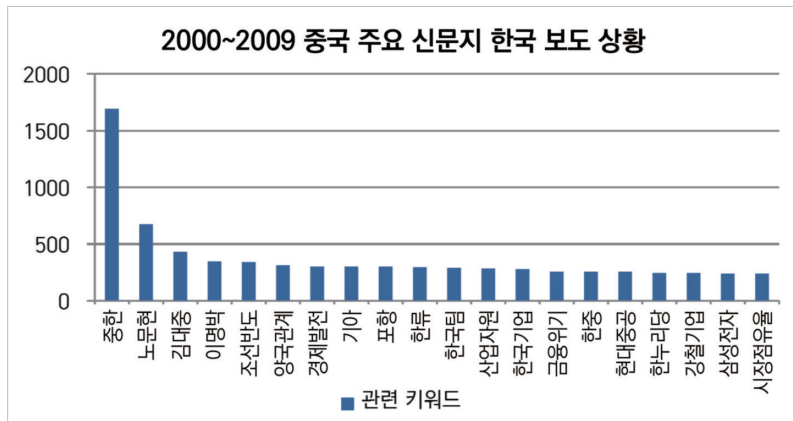
-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위해 유학생들은 상대국가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상대국가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생활 속에서도 상대국가 국민과 접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가장 상대국을 잘 이해하는 단체로 됨. 이 집단의 확대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효과적인 소통의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한파’, ‘지중파’ 대량 양성의 역할 수행.
- 초기의 한국 유학 중국 유학생은 주로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이 주류였고 현재 언어연수생,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면서 학생의 질이 천차만별임. 이는 한편으로 한국 유학이 선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가깝고, 비용이 덜 드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 한국 대학의 국제화 지표를 위한 외국인학생 모집 확대와 대학 경영으로 등록금 긴장 완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의로 학생의 질과 교육의 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상황이 현실임.
- 한국에서는 매년 ‘중국일’행사,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을 포함한 다양한 중국인 대상 공공외교 행사와 기타 교류, 체험 활동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17년부터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명을 상대로 한국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시리즈와 관련 기관 탐방을 기획하여 2년 연속 진행 중임. 이것은 모두 한국 체류 중인 중국인이 한국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통해 한국에 더욱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으로서 의미 있음.

3) 정보통신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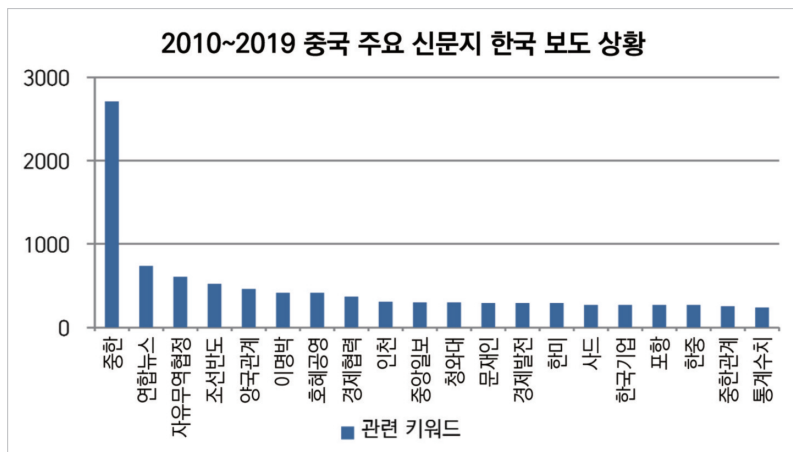
◆ 전통 언론에서의 한국 관련 보도 변화

- 2000~2019년 중국 주요 신문지의 한국 보도를 통계해 본 결과 한국 관련 키워드의 빈도가 미묘하게 달라짐. 중국 학술 사이트 CNKI에서 ‘한국’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20개 중 ‘경제’, ‘산업’, ‘한국금융’ 관련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한류’와 ‘한국팀’이 각각 11위와 1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함. 그러나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키워드는 ‘자유무역협정’ ‘호혜공영’ 등의 키워드는 각각 3위와 7위로, 변화된 한중 관계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반영함. 특히 이 시기 ‘한류’, ‘한국팀’은 20위 안에 들지 못했고,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은 각각 2위와 10위에 올라 중국에서의 한국 언론의 관심과 언급이 대폭 증대한 것으로 보임.

중국에서의 한국
언론의 관심과 언급이
대폭 증대한 것으로
보임



*중국 학술 사이트 CNKI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주요 신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을 검색한 결과. 총 17,453편 관련 보도의 키워드 상위 20개.



*중국 학술 사이트 CNKI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일까지 중국 주요 신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을 검색한 결과. 총 16,525편 관련 보도의 키워드 상위 20개.

◆ 대중 매체의 활성화

-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항전승리기념 열병식 참석 시 중국에서 전례없는 외교예우를 받았고 그 당시 양국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음. 박근혜 자서전 출간 이후 중국에서 인터넷에서의 인기로 화제를 모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 당당망(当当网)의 발표에 따르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을 나를 움직인다』는 2014년 자서전 부문 판매 2위, 2015년 9,10월 2개월 연속 자서전 부문 판매 1위에 올랐고, 2015년 3월까지 60만 부 판매 돌파함.¹⁵⁾ 양국 관계는 당시 인터넷에서 대중들의 뜨거운 토론거리가 되었고 양국 언론도 전례없이 양국관계에 관한 긍정적 보도가 지배적임.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사드에 대한 중국 국민의 반응도 언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국 대중의 애국주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양국 언론 보도의 방향도 급속도로 전향하기 시작함.
- 한중 양국관계는 과거와 비해 많이 냉각되었지만 양국 관련 정보의 획득수단은 정보통신기술과 이동통신수단의 혁신으로 더욱 쉬워졌고 계속 확대해가는 추세임. 한중 간 뉴스는 이미 국경의 계선이 사라졌고, 중국의 뉴스는 바로 한국 언론에 보도될 수 있고, 한국 뉴스는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뜨거운 화제로 됨. 이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양국의 상호 인식과 이해의 채널을 가속화시켰지만, 그 양면성도 존재함.
- 중국 런민론탄(人民论坛)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4.8%는 “국지적인 문제, 돌발적인 사안들이 여론 대결의 전장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고, “개별적인 강력범죄와 같은 부정적 뉴스가 제대로 보도가 안될 경우 일련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76.8%로 나타남.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은 특히 언론의 발달로 개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들이 쉽게 드러나고 확산되며 일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음. 일부 파워블로거 혹은 어떤 외국 언론들은 종종 문제를 붙잡고 오보하거나, 지나치게 해독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됨.¹⁶⁾
- 한국 언론은 중국인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와 인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임. 중국의 부정적인 보도나 균형 잃은 보도는 당연히 중국의 불만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음. 또한 한중 양국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수단의 발달로 1인 미디어 시대에 진입함. 상대국에 대한 주관적인 보도 등은 쉽게 전파되고 국가 간 이해도와 국민 감정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현재 한중 간 일부 ‘협중’, ‘협한’ 정서를 인터넷에서의 표출로 양국 간 국민 호감도에 악순환 주는 현상에 유의할 필요 있음.

현재 한중 간 일부**‘협중’, ‘협한’ 정서를****인터넷에서의 표출로****양국 간 국민 호감도에****악순환 주는 현상에****유의할 필요 있음.**

3. 한중 양국 신뢰 구축을 위한 건의

- 한중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양국에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함. 사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끔 양국 국가이익의 레드라인을 서로 알아야 함. 중국과 미국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 각국 국익을 손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양자, 다자 협력을 전개해야 하는 사고방식 필요함.
- 대중에게 정부 공식 입장과 개인 입장을 구분할 수 있게끔 양국 간 갈등을 기인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 증진이 필요함.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기존 한국공공외교 검토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국민들의 상대국 국가의 인식, 정책 등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함.
- 언론의 지나친 왜곡이나 오판 자제해야 함. 사실을 기초로 한 균형을 갖춘 객관적인 보도 유도해야 함. 국가 간 호감도 쌍방향적인 것으로 본국에 대해 호감도가 낮은 국가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갖기 어려운 것임. 일방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한 것은 한계가 있음. 공동으로 노력해야 서로의 호감도, 친근감을 높일 수 있음.
- 한중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라는 공동인식을 기초로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진 분야, 환경보호, 미세먼지 방지 등 영역에서 우선 협력 진행한 후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 새로 개발하고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얻을 필요 있음. 나아가서 이러한 협력을 한중일 3국으로 확대해 나갈 경험을 축적해야 함.
- 서로의 존중을 얻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혼합 정체성에 대한 포용과 존중하는 국내 정치가 양국관계의 영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유학생 뿐만 아니라 수교 이후 한중 간 국제결혼, 한국 취직 중국인을 비롯한 한국 체류중인 중국인, 중국 체류중인 한국인, 이들은 한중간 오가면서 양국 대중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들은 한중관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또 한중관계의 구축자이기도 함. 특히 청년의 역할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 제3자의 충격과 돌발사건으로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양국 관계 위기대처능력의 강화와 보장장치가 시급함. 특히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이에 연루되지 않게끔 예방할 필요 있음.
- 중국이 진정으로 주변운명공동체, 아시아운명공동체, 나아가서 세계운명공동체를 실현하려면 우선 한중 관계의 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양국 국민간의 친근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국도 진정으로 한반도, 동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혼합
정체성에 대한 포용과
존중하는 국내 정치가
양국관계의 영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함**

북아에서의 자주를 실현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에서 적극적인 양자관계와 다자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인터넷 콘텐츠의 활성화와 중국 국내 드라마, 영화 제작 수준의 향상은 중국 시청자들의 감상 수준을 높여줌. 한중 공동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행 문화 개발하여 협력하는 공간 확대해 나갈 필요 있음.

주 석

- 1)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출처 생략.
- 2) "Pew Report: How Asian Publics View Each Oth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5/09/02/how-asia-pacific-publics-see-each-other-and-their-national-leaders/>(검색일:2019.12.01).
- 3) "中日韩民众陷入'信任危机'?", 『中国青年报』2016年11月09日, 06版.
- 4) 동북아역사재단은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한중일 각 성인 500명(총 1500명)을 대상으로 역사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멀어져가는 한중일 부정적 인식 악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385121>(검색일: 2019.12.01.).
- 5) 马利, "中国人要有自信", 『人民日报』2014年9月4日, 07版.
- 6) "America First? Rating World Leaders: 2019", <https://www.gallup.com/analytics/247040/rating-world-leaders-2019.aspx>(검색일: 2019.12.01)
- 7)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하이테크 수출 동향과 미중 무역분쟁에의 시사점",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rsrchReprtList.do>(검색일:2019.12.01.).
- 8) "《2017中国旅游者意愿调查报告》出炉,旅游超购房买车成消费首选,7成将花费超万元", http://www.sohu.com/a/130415750_180038(검색일:2019.12.01.).
- 9) 일본정부관광국(JNTO)통계, https://www.jnto.go.jp/jpn/statistics/data_info_listing/index.html(검색일:2019.12.01.).
- 10) 中国教育部, 『2018年度我国出国留学人员情况统计』,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1903/t20190327_375704.html(검색일: 2019.12.01.).
- 11) 前程无忧, 『2017海外留学生优秀人才需求报告』, <http://media.51job.com/2013/123/170728.htm>(검색일: 2019.12.01)
- 12) "这些来自中国的'速成博士',让韩国人很紧张", <https://baijiahao.baidu.com/s?id=1634856942746186754&wfr=spider&for=pc>(검색일: 2019.12.01.).
- 13) 中国教育部, 『2018年来华留学统计』,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1904/t20190412_377692.html(검색일: 2019.12.01.).
- 14) 한국교육부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51&m=0310>(검색일: 2019.12.01.).
- 15) "韩媒: 朴槿惠自传在华畅销 累计销量突破60万本", http://www.xinhuanet.com/world/2015-11/25/c_128466711.htm(검색일: 2019.12.01.).
- 16) "人民论坛调查: 网络意识形态现状 十个重要发现", <http://theory.people.com.cn/n/2015/0728/c112851-27371823.html>(검색일: 2019.12.01.).

❖ 저자 약력

■ 于婉莹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중국 신형대국외교 담론과 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제하의 박사논문을 썼다. 현재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방향은 중국의 대외전략과 주변외교이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아시아안명공동체 담론과 외교적 투사」, 「韩国总统迅速开启访美之旅的战略考量」, 「“均衡”的东北亚国际关系与半岛安全结构」 등이 있다.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 본 한일관계 (2019.1~11)

목 차

들어가며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 대학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

1. “역사”와 “법”의 교차점에 위치한 징용공 문제: 2019년 1~3월
 -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연설
2. “역사”와 “법”에서 통상 문제로의 “전선” 확대: 2019년 4~7월
 -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
 - “화이트 국가”제외
3. 링크지되는 통상과 안보, 그리고 “과거”: 2019년 8월
 - 문 대통령에 의한 광복절 연설
 - GSOMIA 파기
4.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통상 문제로의 대처: 2019년 9월~11월
 - GSOMIA 파기 철회

나가며

들어가며

- 일본의 중앙 일간지는 어떻게 한일 관계의 현안 사항에 대해 보도, 논평을 내고 있었는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닛케이 각지에 게재 한 사설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 본고는 각 일간지의 입장과 논조의 유사·차이점을 부각시켜 한국을 둘러싼 담론의 구조적 한쪽 끝을 비추어내는 것으로, 일본 사회에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여기서는 고찰 대상 기간에서 생긴 한일관계에서 생긴 이슈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 문 대통령 삼일절 연설, 일본 정부가 실시한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 “화이트 국가”제외, 문 대통령 광복절 연설, GSOMIA 파기와 철회에 주목해서 일본 중앙지가 사설에서 어떻게 한일관계를 논의하고 금후의 방침이나 자세를 보였는지를 분석하고 여론 조사 결과에도 언급하는 것으로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분위기를 제시하려고 함.
- 또한, 중앙지 중, 아사히 신문이나 닛케이 신문, 그리고 특히 마이니치 신문에서 시민 교류를 호소하는 사설이 많이 게재되었음. 본고에서는 정치 이슈에 관련 사설 분석에 한정하기 때문에 시민 교류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음. 신문에 게재된 일본 시민의 투고 기사나 전문가의 논평 등을 고찰해서 일본 사회의 공기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음.

1. “역사”와 “법”의 교차점에 위치한 징용공 문제: 2019년 1~3월

○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신년 기자회견

- 2019년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신년 기자회견 개최.
- 징용공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에 대해 발언. 중앙 일간지는 모두 사설에서 다루어, 논평을 제시하였음.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징용공문제: 문씨는 판결을 핑계로 하지 마라 (徴用工問題: 文氏は判決を言い訳にするな)”(2019년 1월11일자)는, “국내 사법판단을 이유로, 국가간 약정에 따른 의무를 피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일 외교를 안정화시키는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비판.
- 구체책을 내놓지 않아 “남의 일과 같은 (문 대통령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
- 한국 정부가 판결 후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협정을 바탕으로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해서 일본정부의 방침을 평가. “한국의 부당성을 국제사회로 호소하는 것”을 주장.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징용공문제: 일한에서 극복할 노력을 (徴用工問題: 日韓で克服する努力を)” (2019년 1월11일자)은 “지금 우선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 (징용공)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하며, “일한은 1965년 기본조약이나 청구권 협정을 초석으로 하여, 신뢰와 협력을 심화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문 대통령에게는 “어려운 판단일 것”이라고 동정을 표하면서도, “현안을 넘기기 위해서는, 여론의 노여움을 사서라도 종래 정부 견해를 답습하여, 외교문제를 꼬이게 하지 않는 책”을 조기에 내기를 호소.
- “제3국을 포함시킨 중재위나 국제재판으로 결착시키는 것이 역사문제와 같은 현안에 어울리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여, “어느 한쪽의 주장에 손이 들어져도 감정적 응어리가 남을지도”라고 지적함.

신년사에 대해 모든 중앙 일간지가 문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평가하지 않고 문제는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문 대통령의 징용공 발언: 정치 지도자가 해결을 (文大統領の徴用工発言: 政治のリーダーが解決を)” (2019년 1월11일자)은 “1965년 일한

**3·1절 연설에 대해 요미
우리와 산케이신문
대통령의 대일 자세를 의
문시해서 평가하지 않
고 마이니치, 닛케이는
기본적으로 평가했음.
아사히는 당지 않음.**

기본조약과 이에 따른 청구권 협정을 양국관계의 기반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며, 문 대통령의 자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문 대통령이 정부간 협의에 응하는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구체적인 해결책의 제시도 없고, 오히려 당면 상황을 지켜볼 생각을 표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
-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는 “양국 간 외교 해결의 실패”이며, 양국 간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사실]일 듯) “문 대통령 연설 너무나 시뻘은 일본비판이다 (文大統領演説 余りに勝手な日本批判だ)” (2019년 1월11일자)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일본에) 책임을 전가하였다”고 해 문 대통령은 문제를 되풀이하여, 미래지향을 막고 있으며, “현명”하지 않은 지도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
- 문 대통령이, 징용공문제가 “불행한 역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 인식 자체가 일한의 역사 사실에 반한다”고 비판.
- “한국에게 비난의 소리를 내며 진지한 대응을 요구해가는 것”이 일본정부가 취해야 하는 자세라고 주장.
- 주장 “문 대통령과 북조선 ‘제재 완화’ 경솔히 말하지 마라 (文大統領と北朝鮮「制裁緩和」軽率に語るな)” (2019년 1월14일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마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대변자인 것 처럼” 말한 것에 위구심을 느꼈다고 주장.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하나도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현 단계에서 북한 제재 완화를 논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흔들리는 언동”을 삼가하도록 주장.

⑤ 닛케이 신문

- 사실 “일한 대립 영향을 기업활동으로 넓히지 마라 (日韓対立の影響を企業活動に広げるな)”(2019년 1월11일자)는, “경제계의 대응은 현 시점에서는 냉정”하지만, 현장에서는 불안감도 강해지고 있음에 언급. 향후,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에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면, “일본 기업이 위축하여 사업에서의 철퇴나 투자 축소로 이어질 전개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 연설은 “일본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배려는 안 보였다”며, 일본기업의 불안을 억제되지 못 했다고 지적.
- “사법 판단과는 별도로, 문 정권의 결단으로 외교관계를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고 하며, 한국정부는 일각이라도 빨리 대응책을 제시하여 한일 비즈니스로의 영향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

○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연설

- 2019년 3월1일에 행해진 문 대통령에 의한 삼일절 연설에 관해, 아사히 신문 이외의 중앙 일간지는 모두 사설에서 다룸.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문제의 근저는 이상한 대일관이다”(問題の根底は異様な対日観だ)(2019년 3월2일자)는 한일 양국이 식민지 지배에 얽힌 문제 해결에 진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러한 축적을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의 청산에 고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 문 정권은 “관계 악화를 방치해놓고 일본에 협력을 호소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
- 일본 정부는 “감정적 응수를 피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에 대해 계속 의연하게 주장해 가야 한다”고 제언.

② 아사히 신문

- 아사히 신문은 삼일절 문 대통령 연설에 맞춘 사설을 게재하지 않았음. 약 한 달 전인 2월 9일에 2·8독립 선언 100주년에 맞춰 사설 “일한의 100년: 역사를 성실히 바라보며”(日韓の100年：歴史を誠実に見つめて)를 게재했음.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삼일운동부터 100년: 상호존중으로의 새로운 행보를 (3·1運動から100年：相互尊重への新たな歩みを)”(2019년 3월2일자)은, 문 대통령의 연설이 역사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데에 그쳤으며,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 문 대통령이 “관계 개선을 위한 의욕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
- 문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적 국가 만들기를 위한 것이며,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마찰의 요인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구한 데 대해 “독립운동은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며,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반일기운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다는 것일 것”이라며 “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주장.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반일’로 나라를 통합하지 마라(「反日」で国をまとめるな)”(2019년 3월2일자)는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했을 때야말로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된다”고 말한 데 대해 “직접적인 말로 인한 일본 비난은 피했지만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강경하다”

며 그것은 “한국 측 주장에 일본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호는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고 비판.

⑤ 닛케이 신문

- 사실 “한국은 내셔널리즘 관리를 (韓国はナショナリズム管理を)”(2019년 3월 2일자)은 “친일 잔재 청산”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것, 그리고 한 일이 힘을 합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때라고 말한 것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른다고 우려.
-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생각”도 제시되었다며, 연설”대일 비판을 전체적으로 억제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

2. “역사”와 “법”에서 통상 문제로의 “전선” 확대: 2019년 4~7월

○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

- 2019년 7월4일, 일본정부는 반도체 제조의 재료가 되는 3개 품목에 관해 한국으로의 수출 수속을 엄격화하는 조치를 발동.
- 동 조치에 대해 한국은 반발했으며, 한일관계는 더욱 긴장을 높이는 와중에, 모든 중앙 일간지가 번번이 대한 수출 엄격화를 사설에서 다루었다.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실 “대한수출 엄격화: 문 정권의 일본 비판은 어긋나다 (對韓輸出厳格化: 文政権の日本批判は筋違いだ)”(2019년 7월17일자)는, 한국 정부가 대한 수출 엄격화에 반발하여 일본 비난에 시종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세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한국이 자국의 수출관리 체제를 검증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주장.
- 한국정부에 의한 수출관리 체제가 무르다며 “불법 수출 전제가 늘고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 “일본이 EU와 보조를 맞추는 것만으로 한국이 일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

② 아사히 신문

- 사실 “대한 수출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 (對韓輸出規制: 「報復」を即時撤回せよ)”(2019년 7월 3일자)는, 대한 수출 엄격화에 대해 “자유무역 원칙을 꺾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수출규제조치는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단정하고 “일본정부는 징용공 문제가 배경에 있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에 대해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당연한 조치로서 평가,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비판, 즉시 철회를 주장. 닛케이는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음을 인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
으나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 비판.

- 수출규제는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며 보복의 응수가 될 지도 모른다고 경
종을 울리고 있다. “일한 양 정부는 머리를 식힐 때”이며 “외교 당국의 고
위급 협의로 타개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훼손한다 (韓国への輸出規
制 通商国家の利益を損ねる)”(2019년 7월 4일자)는 대한 수출의 엄격화가
“외교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무역절차를 거론하고 정치의 도구”로 만든 것
이며 “일본이 중시해 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비판.
- 대한 수출 엄격화에 대해 “전 징용공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대
항 조치에 나섰다”고 분석. 한국에서 제시된 방안이 일본에게는 받아들여
기 어려운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수법에
호소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
-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규칙에 따른 자유무역 추진이라는 이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WTO 협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계재.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대한 수출의 엄격화 부당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의사다 (對韓輸出
の厳格化 不当許さぬ国家の意思だ)”(2019년 7월 2일자)는 문 정권이 징
용공 소송과 위안부 문제, 자위대기로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등, 집요하
게 반일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항의를 거듭해도 “마이동풍을 터뜨리는
한국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한 수출 엄
격화를 평가, “국가 의사를 의연하게 보여주는 의미는 크다”고 지적.

⑤ 닛케이 신문

- 사설 “전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 (元徴用工めぐる
対抗措置の応酬を自制せよ)”(2019년 7월 2일자)는 대한수출 엄격화에 대
해 전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를 단행했다”
며 “징용공 문제의 일의적인 책임은 한국 측에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것
은 당연하다”고 지적. 한편, 이러한 통상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기업으로
의 영향 등 부작용이 커, 긴 안목을 볼 때 불이익이 많다”고 우려를 표시.
- 일본 정부에 의한 대한 수출 엄격화는 “국제정치의 도구로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짙다”고 지적하며 자유무역을 맡는 자로서의 평가가

**화이트 국 제외에 대해
요미우리와 산케이
일본정부의 조치를 이
해, 당연한 것으로 주장.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즉시 철회를 주장. 닛케
이는 조치를 이해하면
서도 과도한 무역 제한
되지 않도록 일본정부
에 요구.**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

- 한국이 대한 조치를 취하고 보복의 연쇄가 계속된다면 한일관계 전반에 긴장을 초래한다며 “곤란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

○ “화이트 국가”제외

- 2019년 8월 2일, 일본정부는 우대조치의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결정. 같은 달 28일부터 시행.
- 모든 중앙 일간지는 사설에서 다루었다.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수출우대국 제외: 한국은 왜 현실에 맞지 않는다(輸出優遇国除外: 韓国はなぜ現実に向き合わぬ)”(2019년 8월 3일자)는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것이 수출 제한과 달리 안보조치이며 WTO 규칙에서도 인정된다고 주장.
- 문 대통령이 “책임은 전면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우대국으로 재지정을 원한다면 자국수출관리 적정화가 선결”이라고 주장. 한국의 대응은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대립하는 한-교류 행보도 끊을 것인가(対立する日韓: 交流の歩みも壊すのか)”(2019년 8월 3일치)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보복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일련의 수출관리를 일본은 다시 생각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문 대통령은 “사태가 꼬인 현실과 스스로의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상황 악화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일방적인 책임전가라고 비판.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한국을 ‘수출 우대’ 제외 부정적인 나선형을 피한다(韓国を「輸出優遇」除外 負のスパイラルを案じる)”(2019년 8월 3일자)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극히 이례적인 대응”이라며 “과거 마찰과는 차원의 다른 대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한국의 반일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 한일 양 정부 모두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위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여기까지 꼬인 것은 한국인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일한 양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한일 양 정부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하기가 필요하다고 주장.

- 냉전 종결 이후에도 동아시아 질서 유지에 이르는 한일 역할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고, 북한의 비핵화에는 한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일 공통의 이익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화이트 국가 제외’, ‘어리석음’ 끊임없이 타당한 판단이다 한국은 불신불식 행동일키라(ホワイト国除外「甘え」絶つ妥当な判断だ 韓国は不信払拭の行動起こせ)”(2019년 8월 3일자)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에 대해 “타당한 판단”이라며 “한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의지를 관철한 것으로 지지하고 싶다”고 평가.
- 종전 일본의 대한외교는 안보상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화이트 국가에서의 제외라는 “당연한 일조차 삼가해 왔다”며 “그것을 좋게도 문재인 정권은 반일적 행동을 거듭해왔다”. “이번 조치는 더 이상 한국의 일본에 대한 어리석음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한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
- 한국은 일본 측의 뿌리 깊은 불신감을 직시해야 한다며 수출관리체제의 미비를 고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에 부합하는 나라로 행동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취하는 문정권에는 실망했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에게 좀 더 냉정해지라고 요구한다.

⑤ 닛케이 신문

- 사설 “한일은 마찰 대상을 넓히지 마라(日韓は摩擦対象を広げるな)”(2019년 8월 3일자)는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한국이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는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도 “과도한 무역 제한은 엄하게 계명해 달라”며 자유무역 원칙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
- “양쪽 정치에서의 언행이 상대국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감정적인 응수를 자제하고 안보협력과 민간교류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지적.
- 한국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한일 양 정부는 스스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3. 링크지되는 통상과 안보, 그리고 “과거”: 2019년 8월

○ 문 대통령에 의한 광복절 연설

**광복절 연설에 대해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
는 대일 자세를 기본적으로
평가, 요미우리과
산케이는 일본에 관계
악화의 책임을 기착한
곳으로 이해, 비판.**

- 2019년 8월 12일, 한국 정부는 안보상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일본의 제외를 결정. 9월 18일부터 시행.
- 2019년 8월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한일관계를 언급.
- 모든 중앙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사설로 거론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사설에서 언급.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한국 대통령 연설: 관계복구의 구체책이 보이지 않는다(韓国大統領演説：関係修復の具体策が見えぬ)”(2019년 8월 16일자)는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관계 악화의 원인이 일본에 있느냐 같은 언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
- 한국 정부가 “우선 무역관리 체제를 재검토하고 일본과의 신뢰관계 회복에 힘쓰는 게 근본”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일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인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 문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독재국가와 협력해 통일을 실현하느냐는 의문을 표시하고, “문정권이 취해야 할 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파악하고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에 설파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 차대로 넘기는 호혜관계 유지(日本と韓国を考へる：次代へ渡す互惠関係維持を)”(2019년 8월 17일자)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역사문제의 톤을 낮추고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나서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잇겠다”며 관계 개선을 호소한 것을 평가. 연설을 계기로 “서로의 불이익밖에 없는 보복전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로 걸음을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 양국이 한국 병합의 합법성 위법성에 대해 옥충색으로 결착시킨 경위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은 이제야 병합을 불법으로 삼는다면 배상범위가 끝없이 넓어질 수 있다”며 일본 측의 사치품에 대해 설명.
- 문 대통령에게 “우선은 위안부 합의를 재평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며 행동하기를 호소.
-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한국을 튀겨내는 것만으로는 해결의 길은 열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이 과거 반성에 소극적이라고 보는 한국 측의 불신감을 불

식시키기 위해 “새삼 한반도에 관한 역사인식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

- 한일 정상 간에서 “문정권에 있는 위안부 합의 재평가”와 “아베 정권의 인식을 발신하는 조치”를 동시에 논의할 것을 제안.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문·한국 대통령의 연설 억제된 자세 유지를(文·韓国大統領の演説抑制された姿勢の維持を)”(2019년 8월16일자)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걸어나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당부한 데 주목. “조금 전까지 강한 말로 비난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긴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억제된 톤이 꿰뚫어진 것은 적어도 평가하고 싶다”고 주장.
-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에 대해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데 대해 그러하다면 “일본이 내세우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이라는 이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 한국 외교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본에 흔들여놓는 움직임을 염두에 둔 지적. 문 대통령은 “계속 냉정한 대응에 노력하고 또 그것을 국민에게 당부해 달라”고 호소.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일한관계 개선공은 문 씨의 손에 있다(日韓關係の改善 ボールは文氏の手にある)”(2019년 8월 21일자)는 문 대통령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면 우리는 흔쾌히 손을 잡는다”고 말한 데 대해 “역사 문제에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한 비판을 피한 것이 대일 배려인 것 같다”고 주장.
- 한국 내에서의 “아베 정권이 응할 차례다”(한국지 중앙일보 사설)라는 목소리를 소개한 뒤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 “전후 최악이라는 지금의 한일관계를 초래한 것은 한국의 극단적인 반일적 정책, 행동”이며 문 대통령에게는 그 자각이나 반성이 없다고 비판.
- 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해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겠다”고 비판한 데 대해 “수출관리 강화를 철회시키는 협상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 “우대조치를 다시 얻으려면 한국이 일본의 신뢰를 되찾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⑤ 닛케이 신문

- 사설 “일한은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대응을(日韓は今こそ冷静な対応を)”(2019년 8월 16일자)은 문 대통령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향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잇는다”며 “전후일한이 모두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해왔다”고 말한 것에 주목. 문 대통령이

“일본이 전후 보상으로 일정한 노력을 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며 “일본을 도발하는 듯한 기존 발언과 비교해 대일 비판을 억제한 것은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사태타개에 대한 구체책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며 “징용공 판결을 받고 우선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한관계 수복의 출발점”이라고 주장.

○ GSOMIA 파기

- 2019년 8월 23일 한국 정부는 GSOMIA의 파기를 결정하고 발표.
- 모든 중앙일간지가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사설에서 거론했다.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한국의 협정 파기: 미일과의 안보협력을 훼손했다(韓國の協定破棄: 日米との安保協力を傷つけた)”(2019년 8월 24일자)는 한국의 GSOMIA 파기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
- 문 대통령이 “15일 연설에서 대화를 당부해도 일본 측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갈등의 근간인 한국인 원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구체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해에 시달리는 주장”이라고 반론.
- 일본은 “협정 파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위대와 미군과의 협력 강화와 역지력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중층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호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일한정보협정: 대립확대의 연쇄를 끊어라(日韓情報協定: 対立拡大の連鎖を断て)”(2019년 8월 24일)는 GSOMIA의 파기를 결정한 데 대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냉정한 사고를 헛다녔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한 번 숙고하고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
- GSOMIA 파기 배경에 문정권이 “협정 파기를 요구하는 대북 배려”가 있었을 가능성이나 “미국 스스로가 초래한 위신 저하가 있다”는 등 지적.
- “역사 문제에서 경제, 안보로 번지는 갈등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면서도 “(일한) 보복전의 근본인 것은 징용공 문제이고, 이 현안을 조금씩이라도 진전시키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 “양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차분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

GSOMIA 파기에 대해 모든 중앙지가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한국의 결정에 반대 표명.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실 “한국이 정보협정 파기대립의 고차원화를 우려한다(韓国が情報協定破棄 対立の高次元化を憂える)”(2019년 8월 23일자)는 GSOMIA의 파기에 대해 “일한 양국의 대립이 한층 고차원화돼 안보 분야에까지 미쳐버린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
- GSOMIA 파기 결정 배경에는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를 국내에서 어필하는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
- GSOMIA 파기에 따라 한일 갈등은 더욱 에스컬레이트될 수 있고 한미동맹에도 그림자를 떨어뜨리려 한 데 이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의 일단은 아베 정권에도 있다”고 지적. 문 정부가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불성실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외교 문제와 경제 정책을 엮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국 측의 강한 반발은 예상됐을 것”이라고 주장.
- 한일 갈등의 영향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스포츠, 인적 교류에까지 미치고 있어 “심각한 관계 악화를 개선으로 이끌어갈 책임은 양측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성을 제기.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한국의 협정 파기 북한을 기쁘게 하는 우거다(韓国の協定破棄 北朝鮮を喜ばせる愚挙だ)”(2019년 8월 23일자)는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일미, 미한동맹의 불안정화를 바라는 북한이나 중국을 기쁘게 하는 우거”라며 비판, “일본 정부가 문정권에 항의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 “동북아 안보에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면 문정권은 번복하고 협정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한반도 정세 불안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호소.

⑤ 닛케이 신문

- 사실 “일한 군사협정 파기는 안보에 화근을 남긴다(日韓軍事協定破棄は安保に禍根を残す)”(2019년 8월 24일자)는 GSOMIA 파기에 대해 “동북아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냉정함이 결여된 판단이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GSOMIA 파기 결정은 한일이 중단돼 한미일의 안보협력에 탄력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 한국 정부는 “지역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해 협정의 의의를 재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일본 정부도 “일한관계 개선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

4.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통상 문제로의 대처: 2019년 9월~11월

○ GSOMIA 파기 철회

**GSOMIA 파기 철회에
대해 모든 중앙지가 파
기 철회를 환영하면서
도 징용공 문제 해결이
한일 관계 개선하기 위
해 불가결로 주장.**

- 2019년 11월 22일 한국 정부에 의한 GSOMIA 파기 방침 철회 발표
- 중앙일간지는 모두 GSOMIA 파기철회를 위해 사설을 게재했으나 GSOMIA 실효를 앞두고도 각지 사설을 통해 한국에 파기철회를 당부했던 점은 특징적.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GSOMIA 일미한 안보협력의 시금석이다(GSOMIA「日米韓」安保協力の試金石だ)”(2019년 11월 16일)는 한국에 대해 “북한의 군사도발 억지를 위해 한미일 연계를 유지할 결의가 있느냐”고 물음.
- 한국 측이 GSOMIA의 계속에는 일본 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데 대해 “실효에 이르면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잃고 한미동맹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인식하지 않느냐”고 비판.
- 한국 측이 GSOMIA 파기 이유로 일본에 의한 ‘화이트국가’에서 제의를 꼽고 있지만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미비하기 때문”이며 수출규제 강화와 GSOMIA를 연결되는 것은 도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파기 취소를 자장.
- 사설 “GSOMIA: 한국의 파기 재검토는 당연하다(GSOMIA : 韓国の破棄見直しは当然だ)”(2019년 11월 23일치)는 “일미한3국의 방위협력이 상치받는 사태는 일단 회피됐다”면서도 한일 간 현안 해결은 앞으로 이어져 대화를 거듭하고 신뢰관계 회복에 이르기까지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
- GSOMIA 파기 철회 배경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강한 압력이 효과적이었다고 분석.
- 한국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에 관한 정책대화에 응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한 관계 호전은 한국인 원 징용공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여전히 “문재인 정권은 실효성 있는 선후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한일정보협정: 문정권은 파기 철회를(日韓情報協定: 文政権は破棄の撤回を)”(2019년 11월 16일자)은 문정권에 대해 GSOMIA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GSOMIA 유지가 국익에 이르는 것은 문 정권

도 알고 있을 것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

- “일본 정부도 근사한 태도를 완화하는 필요가 있다”고 지적. “고위급 인사의 대화 틀을 마련하는 등 다가서는 제스처를 내림으로써 일단 협정의 지속을 도모하지 않겠느냐”고 제언.
- 사실 “한일정보협정: 관계개선의 계기로 해라(日韓情報協定: 關係改善の契機とせよ)”(2019년 11월 23일자)는 문정권이 GSOMIA의 파기 철회를 발표한 데 “일단 안도”라며 “문제의 근본은 손대지 않고”라며 “이치불사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건전한 관계 회복에 본질을 뒤야 한다”고 주장.
-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사실상의 보복”이라며 “일본 정부에도 관계 개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주장. “문 정권이 잘못된 대항조치의 에스컬레이트를 밟은 이상 일본 정부도 이성적 사고로 돌아와야 한다며 수출규제를 둘러싼 협의를 진정으로 진행해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한일 양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고 양국 관계 전반을 본연의 궤도로 되돌려놓는 발을 내딛어 달라”고 호소.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실 “일한 군사정보협정 실효시키지 않은 노력 끝까지(日韓の軍事情報協定 失効させぬ努力最後まで)”(2019년 11월 19일자)는 이대로 실효시켜서는 손실이 크다며 GSOMIA 유지를 강력히 호소.
- 한국이 GSOMIA를 파기하면 북한에 대해 “일미한의 발길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 3국 연계를 약화시키고 싶은 중국을 이롭게 될 것”이라고 지적.
- “실효가 되면 다시 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협정 유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
- 사실 “일한 정보협정 유지 최악의 사태는 회피됐다(日韓情報協定の維持 最悪の事態は回避された)”(2019년 11월 23일자)는 GSOMIA의 실효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판에서 회피됐다”며 “일한 안보협력의 틀이 일단 유지된 것”에 대한 안도감을 보여준다.
- 한국 정부가 GSOMIA의 실효 회피와 함께 WTO 제소 중단도 결정한 데 대해 “일한 간에 어디까지 접어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한일 양국이 “합의에 이른 것은 양국 모두 미국에 얽힌 측면이 크다”고 지적.
- GSOMIA 실효 회피가 민간 교류가 가늘어지면서 양측의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곧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유보. 이를 계기로 ‘조금씩 신뢰 회복을 향한 행보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주장.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군사정보협정한국은 부당한 파기 철회를(軍事情報協定 韓国は不当

な破棄撤回を)”(2019년 11월 16일자) GSOMIA에 대해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와 얽히는 것은 도리가 통하지 않는다며 “전제조건 없이 GSOMIA 유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

- GSOMIA는 “일미, 미한이라는 두 동맹을 연결해 왔다”며 “그것을 파기하면 지역 위협인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해 얽혀온 일미한 협력이 후퇴해 버린다”고 주장. GSOMIA 파기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유사에 대한 미국의 즉시 태웅 태세제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지역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싶은 중국은 기쁘며 미한 동맹을 소멸시키기 위해 한국에 경연양양의 일감을 강화할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
- 주장 “GSOMIA 연장한미일 협력을 다시 세워라(GSOMIA延長 日米韓の協力を立て直せ)”(2019년 11월 23일자)는 GSOMIA 실효를 회피하는 동시에 WTO 제소 절차 중단, 한일 양 정부 직접 대화 실시를 결정한 데 대해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방침 변경에 일정한 평가를 한 것”에 언급. 문 정권이 “GSOMIA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직전에 그만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
- 문정권의 “GSOMIA 파기 움직임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관계나 한미 동맹을 크게 해친 것은 확실하다”며 “일미한의 실효적인 안보협력과 한미 동맹 재건이 시급하다”고 주장. 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 자신이 자국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확보하기 보다 감정적인 반일로 달려왔다는 잘못된 자세를 깊이 반성하고 일본과 미국과의 진정한 협조노선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

⑤ 닷케이 신문

- 사실 “협정 유지를 계기로 한미일 체제를 다시 세우라(協定維持を機に日米韓体制を立て直せ)”(2019년 11월 23일자)는 한국 정부가 GSOMIA 파기 방침을 수정한 데 대해 “대국적 견지에 선 판단을 환영”하고 WTO 제소 절차 중단과 수출관리 실무자회의 개최 결정도 “조건부로 접어든 것은 전진”이라고 평가.
- 한일관계 악화는 폭넓은 분야에 미치고 있다며 GSOMIA 파기 철회를 한 일관계 수복하는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한국 측은 최대 현안인 원 징용공 문제로 타개책을 제시하며 수출체제 미비를 시정하고 일본 측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 정부도 “한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납치 문제도 안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웃집의 한국을 잇고 한미일 체제를 다시 세우는 때”라고 호소.

나가며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든 중앙 일간지가 문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해 평가하지 않음. 한국 측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주장. 산케이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안보관도 비판하는 대상.
- 문 대통령의 3·1절 연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연설 내용은 설득력 부족으로 평가하지 않음. 아사히는 연설에 닿지 않고 마이니치는 연설을 평가하고 한국의 독립 운동에 이해를 제시하며 역사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한일 지도자가 발신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 산케이는 연설 내용에 대해 한국의 주장에 일본이 따라야 우호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지 않음. 닛케이는 연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역사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고양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
- 반도체 재료의 수출 엄격화: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 닛케이는 조치에 일정한 이해를 표시하지만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는 수출 엄격화가 징용공 문제에서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고 지적.
- 화이트 국 '제외':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 우려에서 취한 조치이며 한국은 수출 관리의 적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 아사히는 조치의 철회를 주장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호소. 마이니치는 직접 조치 철회에 언급했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외교적 해결을 추구. 산케이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하고 문 대통령에게 더 냉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 닛케이는 안보상의 우려의 조치로 이해하지만 과도한 무역 제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한일 양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
-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중앙 일간지의 사설은 모든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호소한 발언에 주목.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는 대일 비판을 억제한 점에서 연설 내용을 기본으로 평가. 한편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일본 관계 악화의 원인이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지 않음.
- 중앙지 사설 경향과 비슷하고 일본 여론에서도 대한 수출 관리 강화를 지지하는 일본인이 대다수. 닛케이 여론 조사 (2019년 9월1일자) 결과에

따르면 수출 관리 강화지지는 67%, 지지하지 않음이 19%이며 지난 7월 같은 조사 시 보다 9% 증가했음. 마이니치 신문 여론 조사 (2019년 9월 16일자)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음. 이 조사는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64%가 지지, 2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음. 반면, 이 여론 조사는 문제 해결하기에 향해 일본 정부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7%이고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사람은 29%이었음. 중앙지 사설중 다수파의 논조 반영하고 있음.

- GSOMIA 파기: 모든 중앙 일간지는 지역 안보 체제를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이 GSOMIA 파기를 결정한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 GSOMIA 파기 철회: 모든 중앙 일간지가 한국의 GSOMIA 파기 철회를 환영.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닛케이는 한일의 신뢰 관계가 회복하거나 낙관하지 못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회복을 위해서는 징용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특히 요미우리, 산케이, 닛케이는 한국 측이 징용공 문제 해결 방안을 나타내는 필요성을 주장. 아사히는 GSOMIA 파기 철회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2019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에 걸쳐 실시된 한일접촉을 통해 악화된 한일관계의 국면 변화. 중앙지 논저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줌. 외교적인 분위기 변화에 비교해 일본 사회에서의 대한 감정은 악화된 상태가 계속됨.

- 2019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한일관계를 보면 2019년 10월하순부터 11월 상순에 걸쳐 실시된 한일 정상 수준에서 실시된 한일 접촉, 다시 말하면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 회담 (10월24일), 11월3일, 문희상 국회 의장 일본 방문과 그 때 수교된 문제인 대통령의 아베 총리 앞 친서, 그리고 11월 4일에 방콕에서의 아베 총리와 문제인 대통령과의 대화가 악화된 한일관계에 변함이 보이는 계기가 되었음. 모두 중앙지가 연속된 한일 접촉에 언급, 산케이 신문 이외 긍정적으로 평가. 또, 모두 중앙지가 악화된 한일관계에서의 근본적 문제는 징용공 문제이며 대화로 해결하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 특히 닛케이 신문은 서로 양보하는 중요성에 대해 직접 언급.

- 외교적인 분위기가 변하기를 보여주었던 반면,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 닛케이 여론 조사 (2019년 11월24일자) 는 69%가 “일본이 양보하는 정도라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보하기도 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은 21% 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10월에 실시한 결과와 변함이 없었음.

- 마지막으로,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간의 ‘역사’에 어떻게 마주 할 것인가에 대해 ‘온도차’가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일본 사회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019년 6월10일자)에 따르면 징용공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해결되었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78%가 납득할 수 있다고 대답했음. 이러한 여론은 이제도 변화가 없다고 보임. 징용공 문제는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역사’와 ‘법’ 모두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한일관계는 징용공 문제를 통상, 안보 문제에서 분리하고 역사화 범모든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모색하고 실행하기가 필요함.

❖ 저자 약력

■ 고바야시 소메이(小林 聡明)

니혼 대학(日本大学)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准教授). 일본 히토츠마시대학(一橋大学) 사회학부 사회학 학사, 석사, 박사. 일본학술진흥회(JSPS) 특별연구원, 동경대, 메릴랜드대, 서울대, 고려대, 동서센터(East-West Center in Washington), 케임브리지대, 경희대 등에서 연구, 교육 활동. 한반도 지역연구, 동아시아 국제정치사/미디어사를 전공. 일본어로 된 주요 연구로서 단독저서『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空間』(2007), 공동저서『メディアと文化の日韓関係』(2016) 외 기타 논문 다수. 한국어로 된 연구로서 공저서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 (2018) 외 기타 논문 다수

Recent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ublic Diplomacy

HAN Intaek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Though overshadowed by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and aggressive unilateral diplomacy, there has been a bipartisan and unprecedented level of support among the American public for international trade and alliances. With regard to the Korean Peninsula, polls show that a majority of the American public thinks that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should be either maintained or even increased and considers North Korea as a threat comparable to Russia or China. Polls also show that one-third of Americans consistently support preventive nuclear strikes against North Korea.

2020 is a Presidential election year in the U.S. when candidates face a greater need to incorporate public opinion in their campaign promises and actual policies. To take advantage of the American public's growing preference for internationalism and their views on Korean Peninsula issues in an election year, active public diplomacy is needed.

Chinese Perception of South Korea after the THAAD Dispute

于婉莹 (Senior Researcher,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South Korea-China relations suffered a severe blow from the THAAD dispute in 2017, and began a downward spiral from the "most friendly relationship in history." Chinese people's perception of Korea is becoming more multi-layered and complex, and it is difficult to assess it simply as good or bad. The essay analyzed the change in the Chinese perception of South Korea by studying recent opinion polls and identified tasks to be solved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The Chinese perception of South Korea and the South Korean perception of China interact with each other. Therefore, while efforts to enhance China's understanding and affinity for Korea are needed, inducing Korea's objective recognition of China is also an important task for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How Japan Views Korea-Japan Relations: An Analysis of Major Newspaper' Editorials (January–November, 2019)

KOBAYASHI Some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t Nihon University's College of Law)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convey the “air” spreading in Japanese society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osition and tone among the editorials of major newspapers in Japan. There is a slight “temperature difference,” but all the major newspapers argued that the wartime labor issue should be re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other words, a strong notion exists in Japanese society that the wartime labor issue should be resolved within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is notion forms the basis for the accusation that South Korea i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wartime labor issue must be separated from trade issues and security issues, and a solution that satisfies both “history” and “law” should be found out.

Public Opinion in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ublic Diplomacy

3

Recent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ublic Diplomacy

HAN Intaek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21

Chinese Perception of South Korea after the THAAD Dispute

于婉莹 (Senior Researcher,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40

How Japan Views Korea-Japan Relations:
An Analysis of Major Newspaper' Editorials (January–November, 2019)

KOBAYASHI Some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t Nihon University's College of Law)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